KIEP 오늘의 세계경제
WORLD ECONOMY UPDATE
2013년 7월 31일 | Vol. 13 No. 17
ISSN 1976-0515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총괄책임 정성춘 국제경제실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http://www.kiep.go.kr

차 례

I.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1. 세계경제 성장 ····· 4
2. 국제금융시장 ····· 7
3. 국제상품시장 ····· 11
4. 국제통상환경 ····· 16

II.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재정건전화 방안 협상 및 전망 ····· 20
2. EU의 재정긴축 완화 움직임 및 구조개혁방안 ····· 23
3.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개혁 전망 ····· 27
4. 일본 아베노믹스의 내용과 평가 ····· 31

III. 2013년 하반기 주요 지역별 경제전망

1. 선진 경제 ····· 34
2. BRICs 경제 ····· 48
3. 기타 신흥지역 경제 ····· 64

주요 내용 ●●●

▶ 2013년 세계경제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경기회복 부진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지난해 말 예상을 하회하는 3.2%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KIEP는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2012년 10월)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3.2%로 전망함.
-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된 이유는 유럽 재정긴축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서 유럽 주요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과 중국 산업생산과 소비 둔화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한 것임.
- 세계경제는 2012년 4분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도에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성장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반기 경기 개선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 선진 경제의 경우 유로지역의 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으나, 미국과 일본은 완만한 실물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큰 폭(1.3%포인트)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3년 연간 -0.6%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 유럽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원인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부채조정과 이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임.
- 미국은 2012년(2.2%)보다 다소 낮은 1.8%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과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 다만 시퀘스터(sequester)로 인한 재정긴축의 영향 정도와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으로 한 통화정책 출구전략 시행 여부가 하반기 성장세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임.
-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소비와 수출을 개선시키며 1.5%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됨.
  - ○ 아베노믹스 효과 지속 여부가 하반기 일본 경제의 관건임.

▶ BRICs 국가들의 성장률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반면, 아세안 주요국은 견조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중국은 민간 부문 경기 위축과 함께 정책적인 경기 연착륙 시도가 지속되면서, 종전(8.3%) 에 비해0.6%포인트 하향 조정한 7.7% 성장을 전망함.
  - ○ 성장률 하락의 원인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정책으로 인한 소비감소,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감소,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적인 측면이 크며,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브라질과 러시아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선진국 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감소로 성장률 전망을 종전에 비해 크게 하향 조정하였으며, 브라질은 2.7%, 러시아는 2.4% 성장을 전망함.
- 인도는 수출감소와 수입증가로 무역수지 적자폭이 증가하면서 종전보다 1.1%포인트 하향 조정한 5.4% 성장을 전망함.
- 아세안 주요국은 대외 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 받지 않으면서 5.5%의 견조한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함.

I.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

1. 세계경제 성장

■ 2013년 세계경제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경기회복 부진과 중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 지난해 말 예상을 하회하는 3.2%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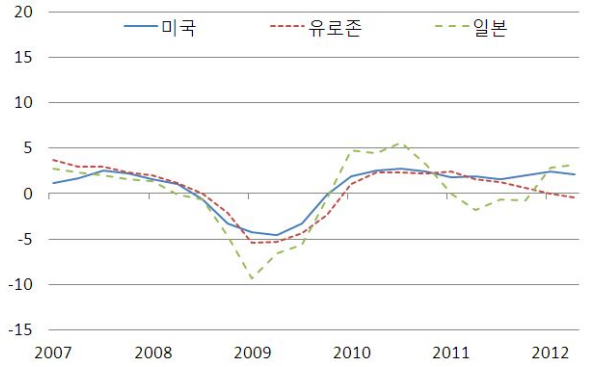
- KIEP는 201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종전 전망(2012년 10월)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3.2%로 전망함.
  - ○ 세계경제는 2013년 상반기에 3.0% 성장에 그친 반면, 하반기에는 3.4% 성장할 것으로 전망
  - ○ 3.2%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임.
- 세계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의 주요 이유는 유럽 재정긴축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서 유럽 주요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된 것과 중국 산업생산과 소비 둔화로 인해 성장률이 하락한 것임.
- 세계경제는 2012년 4분기 저점을 통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3년도에 상저하고(上底下高)의 성장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하반기 경기 개선 속도는 매우 완만할 것으로 전망됨.

■ KIEP의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됨.

- 2013년 연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100달러로 가정
- 미국의 재정건전화 계획과 국가채무한도 상한조정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조건부 합의에 이를 것과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 출구전략 시행이 연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정
- 유럽의 재정 긴축정책 시행이 완화될 것과 유럽중앙은행(ECB)이 당분간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을 가정
- 일본 아베노믹스 정책의 효과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을 가정

그림 1. 선진국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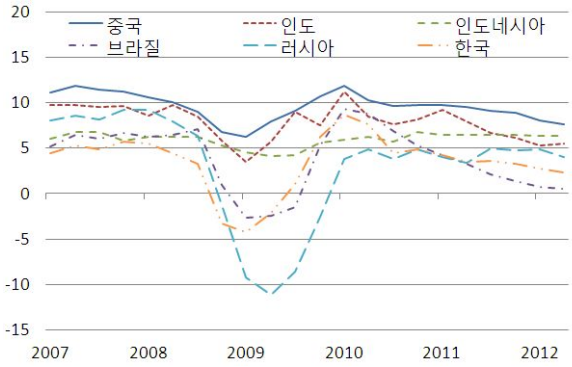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대비
자료: Bloomberg.

그림 2. 신흥국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주: 전년대비
자료: Bloomberg.

■ (선진국) 유로지역의 성장률이 크게 하향 조정되었으나, 미국과 일본은 완만한 실물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유로지역 성장률은 종전(0.7%)에 비해 1.3%포인트 하향 조정한 –0.6%로 전망됨.

○ 이는 지난해(–0.6%)와 동일한 수준의 성장임.

○ 상반기 –1.0%에 이어 하반기에도 –0.2%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만 독일 등 일부 회원국들은 하반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종전 전망과 동일한 1.8% 성장이 예상되며, 상 · 하반기 고른 성장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연 1.8% 성장률은 지난해(2.2%)보다 낮은 수준이며, 미국의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는 성장으로 평가되나, 유로지역과 중국의 저성장 조건하에서 견실한 성장으로 평가됨.

–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소비와 수출을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돼 종전에 비해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1.5%의 성장률이 전망되며, 상반기(0.5%)에 비해 하반기(2.4%)에 높은 성장이 예상됨.

○ 연 1.5% 성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있던 2012년 2.0% 성장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견실한 성장으로 평가됨.

표 1. 2013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2012년[3] (연간)	2013년			
		[2012년 10월] (연간)	[2013년 6월] (연간)	(상반기)	(하반기)
세계[1]	3.2	3.4	3.2	3.0	3.4
미국	2.2	1.8	1.8	1.8	1.8
중국	7.8	8.3	7.7	7.6[3]	7.8
일본	2.0	1.4	1.5	0.5	2.4
유로지역	–0.6	0.7	–0.6	–1.0	–0.2
–독일	0.9	1.6	0.3	–0.1	0.8
–프랑스	0.0	1.1	–0.3	–0.5	–0.2
영국	0.3	1.3	0.7	0.6	0.8
브라질	0.9	4.2	2.7	2.0	3.4
인도	5.1	6.5	5.4	4.8	5.9
러시아	3.4	4.0	2.4	2.1	2.7
ASEAN4[2]	6.3	5.4	5.5	5.6	5.5
–인도네시아	6.2	6.1	6.1	5.9	6.2
–말레이시아	5.6	4.4	4.4	4.2	4.6
–필리핀	6.6	5.5	6.6	6.8	6.4
–태국	6.4	4.6	4.8	5.3	4.3

주: 1) PPP 환율 기준.
2) ASEAN 4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GDP, PPP 기준.
3) 2012년과 중국의 2013년 상반기는 실적치.
4) [ ] 안은 전망시기.

■ (신흥국)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은 선진국의 수요부진으로 인한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하반기 회복세를 보이며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민간 부문 경기위축과 함께 정책적인 경기 연착륙 시도가 지속되면서 종전(8.3%)에 비해 0.6%포인트 하향 조정한 7.7% 성장이 전망되나,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로 판단됨.

○ 연 7.7%의 성장은 2001~11년 중국이 기록한 8% 이상의 성장률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지난해(7.8%)와 비슷한 수준이며, 2013년 전인대에서 결정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7.5%를 상회하는 수준임.

○ 상반기 7.6%의 성장에 이어, 하반기에는 7.8% 성장이 전망됨.

○ 성장률 하락의 원인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반부패 정책으로 인한 소비감소,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수출감소,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의 정책적인 측면이 크며,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목표 수준을 하회하는 경기 둔화가 올 경우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적 대응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판단함.

– 브라질은 수출감소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지면서 종전(4.2%)에 비해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한 2.7%의 성장을 전망함.

○ 브라질의 2013년 1~6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한 데 반해, 수입은 8.4%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하였음.

○ 하반기에는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여 상반기(2.0%)보다 훨씬 높은 3.4%의 성장을 전망함.

– 인도는 중앙은행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며 종전(6.5%)에 비해 1.1%포인트 하향 조정한 5.4%의 성장을 전망함.

○ 이는 지난해의 5.1% 성장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나 그 이전 5년간 평균수준(2007~11년 평균 8.3%)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성장임.

– 러시아는 수출감소와 함께 원유 가격하락의 영향을 받아 종전(4.0%)에 비해 1.6%포인트 낮은 2.4%의 성장을 전망함.

○ 이는 지난해(3.4%)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상반기(2.1%)보다 하반기(2.7%)에 다소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

– 아세안 4개국에 대한 성장률은 종전(5.4%)과 비슷한 수준인 5.5% 성장을 전망함.

○ 이는 지난해의 6.3%보다 낮은 수준이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지속으로 인해 견실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상 · 하반기 고른 성장 패턴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미국의 재정긴축과 양적완화 축소 논의, 유럽 재정긴축 완화 논의, 아베노믹스 효과 지속 여부 등이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

– 미국은 3월부터 시행된 시퀘스터로 인한 재정긴축 효과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효과가 예상보다 클 경우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있음.

○ 또한 미 연준이 양적완화 종료와 통화정책 출구전략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

– 유로지역의 재정긴축이 예상보다 큰 경기위축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 긴축완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향적인 결과가 있을 경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은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예상보다 저조하거나 정책 내용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이 확산될 경우 일본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

2. 국제금융시장

가. 주요국 환율

1) 2013년 상반기 동향

■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일본의 금융완화정책 시행으로 달러가 주요국 통화대비 강세를 보임.

- 미국 달러 가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으로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고용과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미국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면서 상승하였음.

○ 달러 인덱스는 5월 말 연저점(2월 초) 대비 6.6%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13년 6월 말 83.14로 연초대비 4.3%, 연저점 대비 5.1% 상승한 수준을 기록

- 반면 유로존의 민간소비 부진과 고실업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2012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이던 달러/유로 환율이 올해 들어 하락하여 등락을 거듭하고 있음.
- 엔/달러 환율은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정책과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13년 5월 중순 연초대비 15.9%까지 하락하였다가 아베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다시 상승하여 2013년 6월 말 연초대비 12.5% 하락한 수준을 기록

■ 원/달러 환율은 연초 북한 관련 위험이 고조되고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이탈하면서 상승

-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우려로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이 이탈하는 가운데 4월 들어 북한의 핵위협 등 지정학적 위험 고조로 원/달러 환율은 연초대비 7.2%까지 상승

그림 3.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1] 추이

주: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자료: Bloomberg.

그림 4. 달러/유로, 엔/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원/달러 환율은 이후 북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하락하였다가 최근 미국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흥국으로부터의 자본회수 현상이 나타나면서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말 현재 연초대비 7.4% 상승한 1,142원 수준임.

2) 2013년 하반기 전망

■ 미국의 경우 통화정책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유로지역과 일본 등 다른 중앙은행은 통화완화정책을 유지할 전망이어서 당분간 달러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전망

– 미국 경기회복 여부에 따라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으나 하반기 이후 미국이 양적완화 규모를 점차 축소하는 출구전략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음.

○ 버냉키 미 연준(FRB)의장은 지난 6월 통화정책회의(FOMC)에서 현재와 같은 경기회복 속도가 유지된다면 하반기 매월 매입하고 있는 채권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통화완화정책 시행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변화는 자금흐름의 급반전(reversal)을 가져오고 자산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일본 아베 정부는 당분간 적극적인 통화완화와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유로존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ECB도 양적완화 기조를 유지할 전망임.

– 또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세 개선이 뚜렷하지 않은 점도 달러 강세 기조 전망의 한 이유임.

○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7%대를 기록하는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따라 자금유출 및 자산가격 조정이 이루어지면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 약세로 나타날 전망임.

■ 2013년 하반기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대외불안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

– 달러 강세로 상반기 평균(1,104원)에 비해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북한 관련 위험이 해소되고 하반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하락폭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미국 출구전략과 일본 엔저 현상 등 대외요인으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임.

표 2. 주요 금융기관의 환율 전망치

금융기관	원/달러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Q3 13	Q4 13	Q1 14	Q3 13	Q4 13	Q1 14	Q3 13	Q4 13	Q1 14	Q3 13	Q4 13	Q1 14
Credit Suisse(7월 24일)	1,148	1,172	1,180	1.30	1.31	1.32	104	109	114	6.15	6.16	6.15
JPMorgan(7월 22일)	1,100	1,080	1,070	1.30	1.30	1.32	102	105	106	6.13	6.10	6.08
Barclays(7월 19일)	1,115	1,100	1,093	1.27	1.26	1.25	103	104	105	6.16	6.14	6.11
Standard Chartered (7월 19일)	1,125	1,110	1,080	1.27	1.25	1.30	99	100	102	6.15	6.18	6.15
Citigroup(7월 16일)	1,174	1,163	1,151	1.30	1.29	1.28	100	105	109	6.16	6.17	6.18
Morgan Stanley (7월 5일)	1,130	1,170	1,190	1.29	1.26	1.24	103	107	110	6.19	6.10	6.09
Nomura(7월 1일)	1,140	1,150	1,145	1.25	1.20	1.19	101	102	102	6.18	6.18	6.18
HSBC(6월 14일)	1,140	1,150	1,150	1.26	1.24	1.23	99	99	97	6.15	6.16	6.16
BNP Paribas(6월 12일)	1,150	1,120	1,120	1.28	1.26	1.26	106	108	110	6.19	6.12	6.09

주: ( ) 안은 전망치 발표일.
자료: Bloomberg.

- 국제금융기관들은 원/달러 환율이 현 수준에서 소폭 상승하여 2013년 하반기 중에는 평균 1,14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나. 주요국 금리

1) 2013년 상반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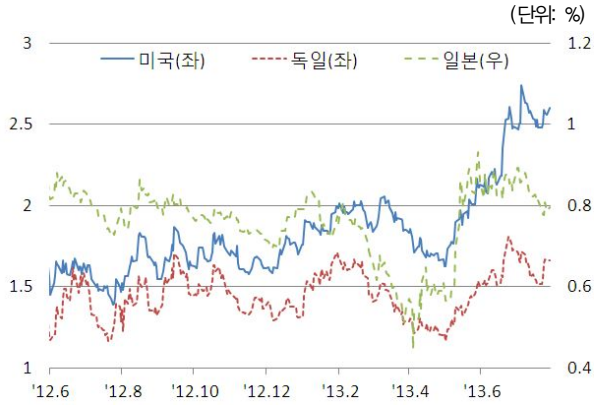
■ 초저금리 정책 지속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의 국채금리는 상승

- 미국과 일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를 각각 0~0.25%, 0.1%의 초저금리로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존의 경우 경기부진으로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0%로 25bp 인하하였음.
-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장기(10년) 국채금리의 경우 경제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5월에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13년 6월 말 현재 각각 2.5%(5월 대비 86bp 상승)와 1.7%(5월 대비 56bp 상승) 수준임.
- 일본의 경우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금융완화조치 발표로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촉발되어 장기(10년) 국채금리가 급격히 상승하였음.
  - ○ 일본은행은 1월에 2%의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하고 무기한 자산매입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4월에는 2년 내 2%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완화조치를 발표하였음.
  - ○ 그러나 국채매입을 통한 금리하향 안정과 물가상승률 2% 달성은 모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금융완화조치로 인해 향후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국채가격이 하락하였음.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외국인 투자자본 유입 지속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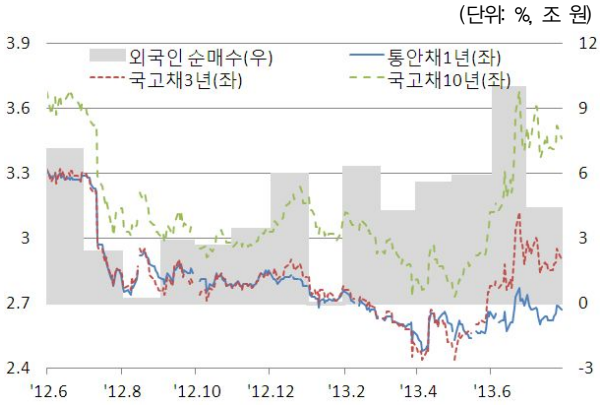
- 올해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 장단기 채권금리 모두 하락하였음.
- 그러나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25bp 인하한 후에는 그러한 기대감 해소와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라 장기(10년)물을 중심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에 있음.

그림 5. 주요국의 장기(10년) 국채금리



자료: Bloomberg.

그림 6. 우리나라 주요 채권금리



주: 외국인 순매수는 상장채권 기준(결제 기준)으로, 월간 누적액.
자료: Bloomberg.

○ 2013년 6월 말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5월의 연저점 대비 67bp 상승한 3.40%를 기록했으며, 국고채 3년물은 2.88%(5월 대비 44bp 상승), 통안채 1년물은 2.69%(5월 대비 16bp 상승) 기록

2) 2013년 하반기 전망

■ 2013년 하반기에도 주요국의 초저금리 정책은 지속될 전망

-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경기회복세가 양호한 미국의 경우에도 재정절벽(fiscal cliff) 관련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초저금리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임.

○ 유로존의 경우 이탈리아,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의 위험 고조 시 추가적인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은 적극적인 통화완화정책을 시행할 전망임.

■ 다만 미국의 경우 저금리 기조는 유지하되,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연준의 채권매입 규모축소 등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독일의 경우에도 하반기 경기회복에 따라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할 전망임.
- 일본의 경우 물가상승과 금리안정이라는 정부당국의 정책목표가 상충됨에 따라 정책 성공여부와 시장의 기대가 향후 국채금리의 향방을 결정할 전망임.

■ 신흥국의 경우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채권투자 자금 이탈로 금리가 상승할 전망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약세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신흥국의 채권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초래하여 채권가격이 하락해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도 미국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에 따라 상승할 전망

-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등 투자자금 이탈 가능성으로 금리가 상승할 전망

표 3. 주요 금융기관의 금리 전망치

(단위: %)

		현재	3Q 13	4Q 13	1Q 14	2Q 14
미국	기준금리	0.25	0.25	0.25	0.25	0.25
	장기(10년) 국채금리	2.58	2.44	2.59	2.74	2.93
독일	기준금리(ECB)	0.50	0.50	0.47	0.47	0.47
	장기(10년) 국채금리	1.58	1.63	1.73	1.81	1.88
일본	기준금리	0.00~0.10	0.00~0.10	0.00~0.10	0.00~0.10	0.00~0.10
	장기(10년) 국채금리	0.82	0.89	0.93	0.93	0.91

주: 2013년 7월 1~15일 사이의 주요 금융기관 금리전망 평균.
자료: 국제금융센터.

3. 국제상품시장

가. 국제유가

1) 2013년 상반기 동향

■ 2013년 상반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평균은 배럴당 104.3달러로 지난해(배럴당 109.0달러)보다 하락

- 연초 국제유가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후 미국의 재정위험, 유럽 재정위기 해결 지연 등으로 인해 하락하였음.
- 최근에는 세계 경제회복 부진,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으로 하향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2013년 3.1%로 0.2%포인트 하향 조정(2013년 7월)하였으며,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2013년 7월)하였음.

※ OECD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3.1%로 0.3%포인트 하향 조정(2013년 5월)하였음.

2) 2013년 하반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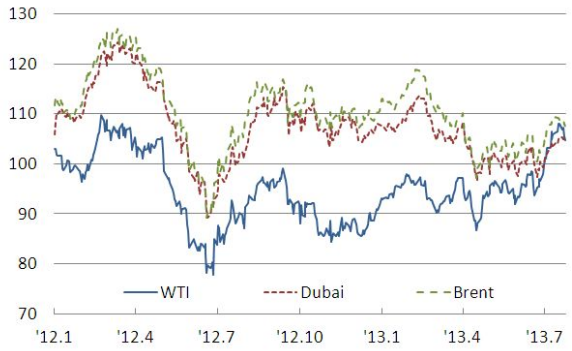
■ 세계경제가 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향후 세계 원유수요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

※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따르면 선진국의 원유수요 감소폭은 일일 40만 배럴로 지난해(50만 배럴/일 감소)와 비슷한데 반해, 신흥국의 증가폭은 2012년 일일 130만 배럴에서 2013년 110만 배럴로 감소할 전망(2013년 7월)

그림 7.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자료: 국제금융센터.

표 4. 연평균 국제유가

(단위: 달러/배럴)

유종	2009	2010	2011	2012	2013년 상반기[1]
WTI	62.16	79.64	95.15	94.12	94.26
Dubai	61.73	78.06	106.10	109.00	104.29
Brent	61.50	79.64	111.21	111.65	107.71

주: 1) 2013년 6월 말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표 5.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세 계	5.2	3.9	3.1	3.1
선 진 국	3.0	1.7	1.2	1.2
신흥개도국	7.6	6.2	4.9	5.0

주: 전년대비, 2013년은 전망치
자료: IMF(2013년 7월),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표 6. 세계 원유수요 증가율 전망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세 계	2.8	1.0	0.9	0.8
O E C D	1.3	-0.9	-1.1	-0.9
비OECD	4.7	3.2	3.1	2.6

주: 전년대비, 2013년은 전망치
자료: OPEC(2013년 7월), Monthly Oil Market Report.

■ 최근 비전통오일 생산의 증대로 세계 원유 공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 OPEC에 따르면 북미를 중심으로 셰일 및 오일샌드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비OPEC의 원유공급은 전년대비 일일 100만 배럴 증가한 5,392만 배럴/일 수준으로 전망(2013년 7월)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셰일 및 오일샌드 생산 증가로 향후 5년 내 북미 원유 생산량이 일일 390만 배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미국의 LTO(Light Tight Oil) 생산량이 일일 230만 배럴 증가하여 미국 원유 생산량은 일일 840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OPEC 생산은 기존 생산목표(300만 배럴/일)를 유지하고 있으나, 비전통오일 생산 증가로 대(對)OPEC 수요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국제유가 하락 시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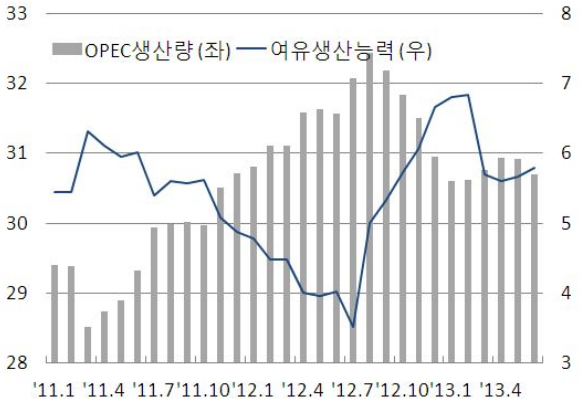
○ IEA에 따르면 북미지역의 비전통 오일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대OPEC 수요가 향후 몇 년간 일일 300만 배럴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2013년 6월)

○ OPEC은 지난 5월 31일 제163차 정기총회에서 현재 수급상황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 생산목표 동결을 결의하였으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또한 서방의 이란 제재, 시리아의 내전 악화, 수단과 남수단의 긴장 재고조, 리비아의 시위 격화 등 중동지역의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이 국제유가에 불안요인으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8. OPEC의 생산량 · 여유생산능력

(단위: 백만 배럴/일)



자료: Bloomberg.

표 7. 세계 원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분 류	2010	2011	2012	2013
수요	87.2	88.1	88.9	89.6
공급	86.5	87.6	89.7	-
비OPEC공급	52.3	52.4	52.9	53.9
OPEC공급[1]	29.2	29.8	31.1	-
OPEC NGLs[2]	5.0	5.4	5.7	5.9
재고변동	-0.6	-0.5	0.9	-

주: 1) 원유
2) 액화석유류(Natural Gas Liquids)
자료: OPEC(2013년 7월), Monthly Oil Market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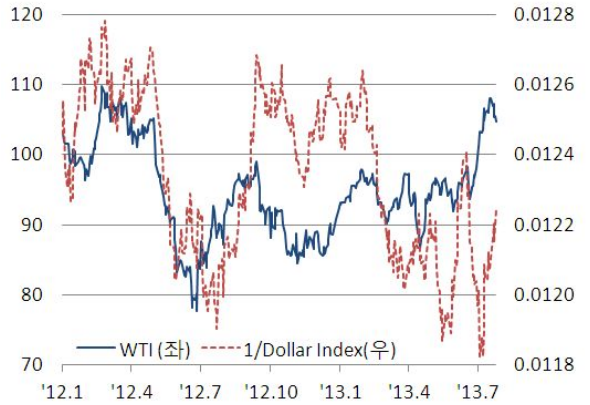
■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에 따른 달러 강세 및 투기자금 이탈은 유가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의 제3차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미 달러화 가치상승(주요 통화 대비), 원유 선물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축소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 있음.

○ 최근 미국 버냉키 연준 의장이 향후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의 출구전략 시행에 대한 우려감이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9. 국제유가와 달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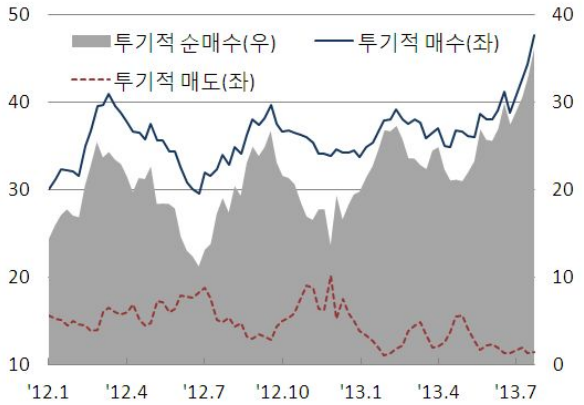
(단위: 달러/배럴, 1/달러인덱스)



자료: Bloomberg.

그림 10. WTI유 선물시장 투기자금 규모

(단위: 1만 계약)



주: 옵션 미포함 비상업적거래 포지션, 1계약=1천 배럴.
자료: CFTC.

■ 따라서 2013년 하반기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상반기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세계 경기회복세 지연으로 국제 원유수요 증가율이 둔화되고 북미지역의 비전통 오일 생산을 중심으로 원유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원유수급은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 원유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자금 유출은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2013년 연평균 국제유가는 지난해(배럴당 109 달러)보다 하락한 배럴당 1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수급균형 및 유가하락에 따른 OPEC의 감산 가능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유가 하락을 제한할 수 있는 위험요소임.

나. 비철금속 및 곡물가격

1) 2013년 상반기 동향

■ 주요 비철금속 가격은 주요 소비국의 수요부진 및 과잉공급으로 하락세를 지속

– 주요 소비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비철금속 가격의 하락압력이 지속되었음.

○ 유로지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0.2%(전기대비)로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7.7%(전년동기대비)로 예상치(8%)를 하회하는 등 성장세가 둔화됨에 따라 비철금속 가격이 약세를 보임.

– 지난해 생산차질을 빚었던 전기동 광산이 이전 생산수준을 회복하면서 공급이 증가하고 재고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비철금속 가격 하락을 부추김.

※ 국제동연구그룹(ICSG: International Copper Study Group)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4월 전 세계 전기동 광산생산이 전년동기대비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재고도 연초대비 2.1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6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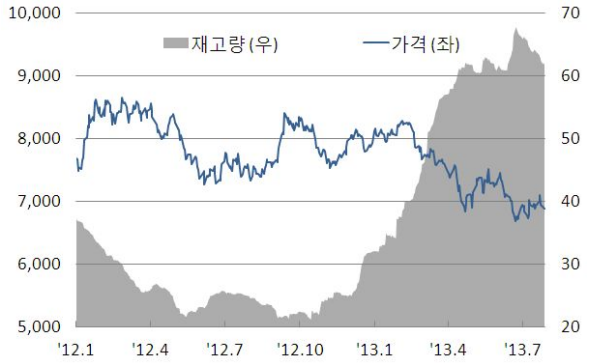
■ 곡물가격은 기상여건 개선 및 생산증대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하향 안정세

–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급등하였던 곡물가격은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경작면적 및 파종률이 개선되는 등 곡물생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격 안정세를 이룸.

※ 미 농무부(USDA)에 따르면 올해 미국 소맥 경작면적은 5,644만 에이커로 전년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옥수수 경작면적은 9,728만 에이커로 1936년 이래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2013년 3월).

그림 11. 전기동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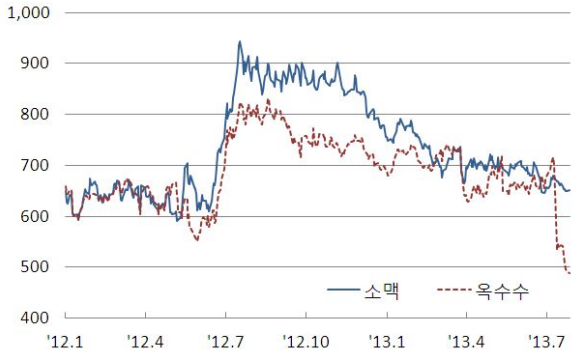
(단위: 달러/톤, 만 톤)



자료: Korea PDS.

그림 12. 소맥 · 옥수수 가격 추이

(단위: 센트/부셸)



자료: 국제금융센터.

2) 2013년 하반기 전망

■ 비철금속 가격은 초과공급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소비국의 경제회복 지연으로 세계 전기동 수요는 소폭 증가하는 데 반해, 전기동 광산의 생산회복에 따른 공급규모 확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ICSG에 따르면 세계 전기동은 지난해 약 40만 톤 초과수요가 나타난 반면, 2013년에는 41.5만 톤 초과공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2013년 4월).

■ 곡물가격은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기상여건 개선, 경작면적 확대 및 파종률 증가 등으로 곡물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USDA에 따르면 2013/14년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24.2억 톤, 소비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23.9억 톤으로 전망돼 수급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2013년 7월).

※ 품목별 생산량은 소맥 6.5%, 조곡(coarse grain)[1] 10.8%, 쌀 1.9%로 각각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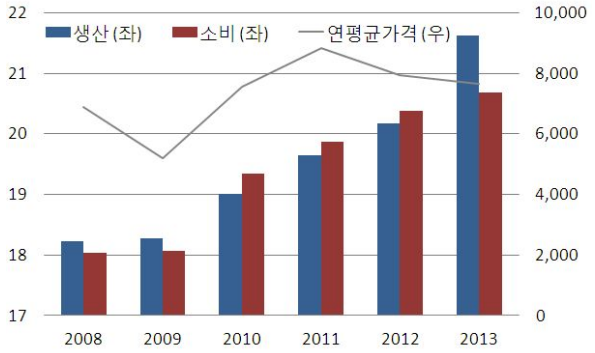
※ 전 세계 곡물 재고량은 전년대비 5.4% 증가한 4.6억 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재고율은 전년대비 0.1%포인트 감소한 19.1%로 예상

– 다만 하반기에 기상여건이 악화된다면 지난해와 같은 가격급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향후 기상여건은 곡물가격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지난해 여름 주요 곡물생산국의 가뭄으로 인해 곡물가격이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그림 13. 세계 전기동 수급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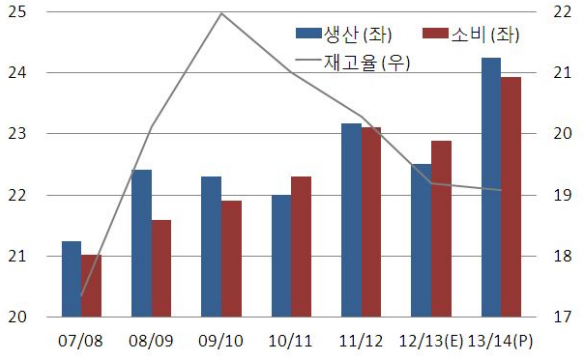
(단위: 백만 톤, 달러/톤)



자료: Korea PDS.

그림 14. 세계 곡물 수급전망

(단위: 억 톤, %)



주: E는 추정치, P는 전망치
자료: USDA(2013년 7월),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1) 옥수수, 보리, 수수, 호밀, 귀리 등

4. 국제통상환경

가. 세계 교역

1) 2012년 종합

■ 세계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2012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011년 5.2%보다 크게 하락한 2.0%를 기록하면서 부진한 양상(WTO, 2013년 4월)

- 선진국의 경우 EU 국가들의 수입감소, 일본의 수출부진 등이 원인으로 작용
- 또한 중국, 중남미 등 신흥개도국들의 교역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전 세계 교역 증가율이 예상보다 급격히 둔화하는 모습을 보임.

■ 지역별 수출입 물량 증가율 추이는 전반적으로 2010년 이후 감소세를 기록

- 지역별 수출물량 증가율 추이를 보면 EU의 경우 2010년 11.7%에서 2012년 0.3%로 감소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2012년 -1.0%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임.
- 또한 아프리카를 제외한 중국 및 중남미 등 신흥개도국들의 교역량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이 감소하였음.

표 8. 지역별 교역량 증가율 추이

(단위: %)

	수출물량			수입물량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전 세계	14.1	5.2	2.1	13.6	5.1	1.9
미국	15.4	7.1	4.1	14.8	3.8	2.8
EU(27)	11.7	5.7	0.3	9.1	2.4	-2.0
중국	28.1	8.8	6.2	22	8.8	3.6
일본	27.5	-0.6	-1.0	10.1	4.3	3.7
한국	19.5	13.8	2.8	13.6	5.9	1.5
중남미	5.2	6.1	1.4	22.7	12	1.8
아프리카	5.4	-8.5	6.1	8.1	4.5	11.3
중동	7.5	5.5	1.2	8.2	5.1	7.9
CIS	6.1	1.8	1.6	18.8	17.1	6.8

주: 전년대비.
자료: WTO(http://www.wto.org).

2) 2013년 전망

■ 2013년 세계 교역량은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존재함.

- 미국의 제조업 회복세 및 일본의 경기부양책 등이 세계 교역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유럽의 재정위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존함.

표 9. 세계 무역증가율 전망

(단위: %)

전망기관	국가군		2010	2011	2012	2013(P)	2014(P)
IMF, 2013년 4월 (상품+서비스)	전 세계[1]		12.5	6.0	2.5	3.6	5.3
	선진국	수출	12.1	5.6	1.9	2.8	4.6
		수입	11.5	4.7	1.0	2.2	4.1
	신흥국	수출	13.3	6.4	3.7	4.8	6.5
		수입	14.8	8.6	4.9	6.2	7.3
WTO, 2013년 4월 (상품)	전 세계[1]		13.9	5.2	2.0	3.3	5.0
	선진국	수출	13.1	5.1	1.0	1.4	2.6
		수입	10.7	3.1	-0.1	1.4	3.2
	신흥국	수출	15.3	5.4	3.3	5.3	7.5
		수입	18.2	8.0	4.6	5.9	7.4

주: 1) 수출, 수입 평균.
2) P는 전망치.
자료: WTO; IMF.

■ 2013년 세계 교역량은 2012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IMF는 일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신흥국의 교역 증가로 2013년 상품 및 서비스 교역 증가율을 약 3.6%로 전망함.
  - ○ 선진국의 경우 수출은 약 2.8%, 수입은 약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수출 4.8%, 수입 6.2%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WTO의 상품교역에 대한 2013년 전망치는 3.3%로 2012년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
  - ○ WTO는 선진국의 경우 수출입 증가율이 1.4%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수출 5.3%, 수입 5.9%의 증가율을 예상함.
  - ○ 이들 상품교역에 대한 WTO의 전망치는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IMF의 전망치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임.

나. 통상환경

■ 미국,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간 FTA 협상 및 지역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세계적으로 통상 패러다임이 변화함.

– WTO의 약화 및 DDA 협상 지연으로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심화하면서 세계 통상질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경제권간 FTA와 지역경제통합 논의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음.

○ 2012년까지 WTO에 보고된 지역무역협정(RTAs: Regional Trade Agreements) 건수는 351건이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역무역협정 체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 블록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임.
※ WTO의 지역무역협정 건수는 상품, 서비스, 가입을 각각 따로 계산한 건수임.

표 10. 시기별 RTA 발효 건수

(단위: 건수, %)

연도	1958~94	1995~2000	2001~05	2006~10	2011~12	계
발효건수	48	53	90	123	37	351
비중(%)	13.7	15.1	25.6	35	10.5	100
(%)	13.7	86.3				100

자료: WTO.

○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협상에 11개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이 협상 참여를 공식 선언한 바 있으며, 2013년 7월 15~25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18차 협상에 공식 참여함.

표 11. TPP 협상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거나 추진 중인 국가

구분(국가 수)	국가
기체결(7)	미국, 칠레, 페루,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상 ASEAN)
협상재개 여건조성(5)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자료: www.fta.go.kr의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작성.

○ 한편 일본과 EU 간 FTA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미국과 EU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을 추진 중임.
※ 미·EU FTA인 TTIP의 경우 DDA 협상 부진 속에 지역통합 논의가 부상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거대선진권 간의 무역 및 투자 자유화로 경제성장의 활로를 찾고 국제규범의 주도권을 강화하고자 FTA를 조속히 추진하여 협상을 2년 내에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표방함.

○ 중국은 한·중 FTA 및 한·중·일 FTA 협상을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추진에 집중하고 있음.
※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중국이 TPP에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중국이 실제로 TPP 협상에 참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불황 장기화로 보호주의 조치가 증가하고 이를 자국 산업육성 정책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확산되고 있음.

- 국제통상에서 관세보다는 비관세장벽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TBT, SPS, 환경, 노동, 경쟁 등 기술규제와 제도적 무역장벽이 증가하는 추세임.

○ 2012년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WTO 사상 최다인 1,560건을 기록함.

○ 미국의 지재권 침해조사(section 337) 건수는 1999년 9건에서 2011년 69건으로 급증

■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다극화되고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면서 신흥개도국이 부상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심화되고 있음.

- 선진국 경제는 당분간 저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신흥국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IMF).

○ 선진국의 성장률 전망(%): (2012) 1.2 → (2014) 2.1 → (2018) 2.5

○ 신흥국의 성장률 전망(%): (2012) 4.9 → (2014) 5.4 → (2018) 6.2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를 활용한 생산 분할 및 분업 증대로 무역패턴이 상품 교역(trade in goods)이 아니라 업무 및 역할을 교역(trade in tasks)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 OECD와 WTO를 중심으로 무역액을 총액이 아니라 부가가치(value added)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가치사슬(GVC) 측면에서 중간재의 활발한 교역을 위해 무역원활화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II.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재정건전화 방안 협상 및 전망

가. 현황 및 쟁점

■ **(시퀘스터 발효)** 미국 의회가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지난 3월 1일부터 2011년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에 따른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 일명 시퀘스터(sequester)가 공식 발효된 상황

- 시퀘스터 발효로 2013년 회계연도인 9월 말까지 850억 달러(연방정부 예산 3.6조 달러의 2.4%)가 감축될 예정임.

○ 세부적으로 국방비 430억 달러(50.6%), 건강, 교육, 국립공원 관리, 허리케인 샌디 복구 등 국내프로그램 260억 달러(30.6%), 메디케어 등 의무지출 110억 달러(12.9%), 농업, 실업수당 연장 등 기타 50억 달러(5.9%)로 요약됨.

- 시퀘스터 발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지만, 4월부터 연방항공청, 세관, 국경경비대, 농무부, 연방검찰, 국립공원에서 무급휴가자가 발생하여 정부부문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남.
- 또한 5월 18일까지 잠정적으로 연기해놓은 국가채무한도 상향 조정이 의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정건전화와 관련된 정치권의 협상이 향후 미국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성장에 중요한 변수로 부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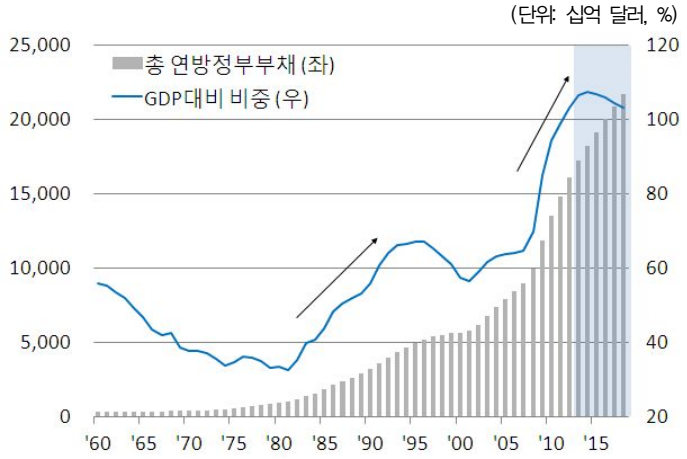
■ **(연방정부채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정부채무가 2013년 말에 17조 2,492억 달러(GDP 대비 106.5%) 수준에 달해 연방정부채무 법정 상한선인 16조 3,94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함.

- 2013년 1월에 연방정부 예산자동삭감과 연방정부채무 상한조정 문제가 겹치자 의회는 5월 18일까지 연방정부 채무 법정 상한선을 해제해 재무부가 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게 허용함.
- 이후 연방정부채무는 16조 7천억 달러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유예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2,60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확보하여 9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
- 그러므로 의회가 9월 초까지 연방정무채무 법정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미국은 국가 부도를 의미하는 디폴트, 즉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고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우려가 팽배

○ 현재 연방정부채무 법정 상한선인 16조 3,940억 달러는 2011년 예산통제법(2011년 8월 2일)에 의거하여 3단계에 걸쳐 상향 조정된 것으로, 이러한 상향 조정은 지난 73년(1940~2013년) 동안 80번으로 연평균 1회 정도 단행됨.[2)]

2) 연방정부채무한도의 법적 근거는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정부재정조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제정된 'Second Liberty Bond Act'이며, 동 법으로 연방정부는 정부채무한도 상한선 내에서 국채발행에 대한 법적 권한을 의회로부터 부여받아 재정관리 업무에 유연성을 확보 받음. 오늘날과 같은 통합적 의미의 법정한도 설정 기원은 1941년 제정된 공공채무법안(Public Debt Act: P.L. 77-7)임.

그림 15. 미국 연방정부채무



주: 음영은 추정치(2013년부터)
자료: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 **(양당 견해차)**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 간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추가 증세, 시퀘스터 세부항목 조정과 의료보험개혁 세 가지로 요약됨.

- (추가 증세) 민주당은 부유층에 대한 추가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 제고와 세수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연초 재정절벽 합의로 세금 문제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증세는 수용할 수 없음을 제시
  - ○ 지난 1월 재정절벽 협상 당시 고소득층의 최고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올리는 대신 고소득 계층의 범위를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에서 45만 달러 이상으로 축소하는 데 합의하였고, 상속세율을 35%에서 40%로, 자본소득 및 배당소득세율을 15%에서 23.8%로 인상함.
- (시퀘스터) 양당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재정지출 감축방법인 시퀘스터에 반대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는 이견이 있는 상황
  - ○ 민주당은 2014년 예산안(2013년 4월 의회제출)으로 시퀘스터를 대체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국방예산보다는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정부지출을 감축하자고 주장
- (의료보험 개혁) 민주당은 메디케어 등 주로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한 삭감방안에 반대한 반면, 공화당은 의무적 정부지출(메디케어 포함) 항목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지출 삭감과 정부부채 한도확대 문제를 연계하여 협상한다는 방침
  - ○ 2010년 제정된 의료보험 개혁법은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는데,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로 메디케어 지출과 관련된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임.

표 12.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한 양당간 견해차

주요 이슈	민주당	공화당
증세	- 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추가증세	- 추가증세 반대
시퀘스터	- 2014년 예산안(2013년 4월 의회제출)으로 시퀘스터 대체	- 국방예산보다는 의료보장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축소하여 정부지출 감축
의료개혁	- 메디케어를 비롯한 사회보장부문 지출 축소 최소화	- 메디케어 등 의무적 정부지출 항목에서 대규모 삭감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부지출 삭감과 정부부채 한도 확대 문제를 연계

나. 전망

■ 미국 연방정부채무는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에 버금갈 정도로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미국 연방정부채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에 GDP 대비 121.7%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전비의 급격한 감소와 퇴역군인들의 노동력 급증 등으로 점차 해소되어 1981년에는 GDP 대비 32.5%까지 감소
- 연방정부채무의 지속적인 급증은 금리를 상승시켜 민간투자 구축을 유발, 결국 기업투자 감소 및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미국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평가되어 미국의 대외신인도 하락과 달러 가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간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재정절벽 및 국가채무 상한조정 실패 시 충격이 매우 커 타협은 되겠지만 상당한 난항이 예상됨.
  - ○ 2011년 8월의 사례,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 현재의 견해차를 고려할 때 벼랑 끝 대치가 오는 9월까지 계속될 수도 있어,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재정건전화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갈등과 대립은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 과정에서도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결국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동반한 조건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국가채무한도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제적인 신용하락 및 위상저하, 자금조달비용 인상, 경기회복 지연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
- 미국 재정적자 감축노력은 경기회복과 함께 점진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정부의 건강 및 연금 프로그램 급증도 재정적자 해결의 난제
- 따라서 재정건전화 방안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됨.

2. EU의 재정긴축 완화 움직임 및 구조개혁방안

가. 최근 EU의 재정긴축 완화 움직임

■ EU/유로존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긴축완화에 대한 EU/유로존 회원국 간 논의가 활발

– 2013년 5월 29일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EU 6개 회원국에 대해 재정적자 목표치(GDP 3% 수준) 달성 시한을 1~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안을 발표함(표 13 참고).

○ 이 정책권고안은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예산 상호 감독체제인 '유럽학기(European Semester)'의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예상 경제성장률과 이에 따른 세수 증감을 감안하여 결정된 것임.

○ 2012년 이후 유로존 회원국 간 긴축 vs. 성장의 논란 속에서 EU 집행위가 공식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향후 국가별로 구체적인 조정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표 13. EU 집행위의 재정적자 감축시한 연장권고

	재정적자 감축시한 연장		2012	2013	2014	2015	2016
프랑스	2013년 → 2015년	기존 계획	-4.5	-3.0	-2.0	-1.0	-
		연장안	-4.8	-3.9	-3.6	-2.8	-
스페인	2014년 → 2016년	기존 계획	-5.3	-3.0	-	-	-
		연장안	-10.6	-6.5	-5.8	-4.2	-2.8
포르투갈	2014년 → 2015년	기존 계획	-4.5	-3.0	-1.8	-0.5	-
		연장안	-6.4	-5.5	-4.0	-2.5	-
네덜란드	2013년 → 2014년	기존 계획	-2.9	-	-	-	-
		연장안	-4.1	-3.6	-2.8	-	-
슬로베니아	2013년 → 2015년	기존 계획	-3.9	-2.9	-2.0	-	-
		연장안	-4.0	-3.7	-3.3	-2.5	-
폴란드	2012년 → 2014년	기존 계획	-3.0	-2.5	-	-	-
		연장안	-3.9	-3.6	-3.0	-	-

주: 1) 재정적자 감축에 대한 기존 계획은 2010~12년에 발표된 EU 회원국의 재정안정보고서(Stability Report 또는 Convergence Report)를 근거로 작성됨.
2) 폴란드는 비유로존 회원국임.
자료: EU 집행위원회(2013년 5월 29일).

나. 경쟁력 제고를 위한 EU의 구조개혁방안

■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는 자각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재정 외에도 산업, 통상, 노동, 행정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됨.

– EU/유로존이 현재의 재정위기에서 벗어나고 긴축기조가 늦춰진다 하더라도 민간 부채축소, 인구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수요진작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바,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그동안 EU 차원의 구조개혁 조치는 EU 회원국의 정책권한 문제, 회원국의 정책적 의지 결여 등으로 인해 그 성과가 미진하였으나, 재정위기를 계기로 정책조율 체제가 강화되면서 추진력을 얻고 있음.

○ 2013년 EU의 GDP는 2008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 측면에서 이원화 현상을 보이고 있어 EU/유로존의 단일성을 유지하고 장기적 목표(경제적 수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임.

– EU 집행위는 5월 29일 '유럽학기'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각 회원국이 구조개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음.[3)]

○ EU 집행위는 ① 친성장적 재정건전화 정책, ② 정상적인 신용조달경로 회복, ③ 산업부문의 경쟁력 개선, ④ 실업문제 해결, ⑤ 행정부문의 개혁 등을 과제로 제시함.

○ 제시된 대부분의 구조개혁은 회원국의 정책영역이나, EU 집행위의 정책제안이 회원국의 사전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점에서 회원국 간에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다 엄격한 상호압력(Peer Pressure)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EU 정상회의(6월 28일)에서는 EU 집행위의 제안 내용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마련에 역점을 두고자 하였음.

■ (친성장적 재정건전화 정책) 경기침체 속의 긴축이 경기를 악화시켜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바, EU 집행위는 기존의 일률적인 긴축 대신 국가별로 '차별화된 성장 지향적' 재정건전화 정책을 권고함.

– 재정건전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음. 그러나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긴축 속도조절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적자 감축시한 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됨.

– 재정긴축에의 속도조절과는 별도로, 회원국 정부는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야 함.

○ EU 집행위는 세입측면에서 근로소득세의 비중을 줄여 근로의욕 고취 및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한편, 이를 부동산 또는 환경관련 세제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함.

3) European Commission, 2013 European Semester: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 Moving Europe beyond Crisis. Com(2013) 350 final.

○ 또한 세금감면 및 보조금 등을 통한 조세지출(Tax Expenditures)의 범위를 점차 줄여나감으로써 세원(稅源)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음.

○ 세출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의 분야에 최우선적으로 공공투자를 집행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함.

– 고령화에 따른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혜 중심의 정책보다는 은퇴연령의 상향조정 등을 통한 노동 참여율 제고 정책에 중심을 맞추어야 함.

■ (신용조달경로 회복) EU 집행위는 기업들에 대한 신용조달경로를 회복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강조

–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은행을 통한 기업에의 자금조달이 여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같은 신용경색을 완화하기 위해서 자본확충만을 강조하는 현재의 은행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질적 측면을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그러한 측면에서 은행동맹(Banking Union)을 위한 단일금융감독체제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기업이 은행뿐만 아니라 기타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적으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하며, 직접자금조달경로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 (경쟁력 개선) EU 집행위는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촉구

– EU 회원국 역내 거시불균형(Macro Imbalance)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적자국과 재정흑자국은 차별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함.

○ 재정적자국은 비교역재(Non-Tradable Sector) 중심에서 탈피하여 교역재(Tradable Sector)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EU 지역 외 국가들에 대한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재정흑자국은 조세감면 및 사회보장기여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경쟁력 개선이 요구되는 국가들은 단위노동비용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한편 규제철폐는 창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기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EU 집행위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이 EU의 서비스지침 규정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경우 0.8~2.6%의 EU GDP 증대효과가 기대됨.

■ (실업문제) 금융위기 이후의 고실업 문제가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EU 차원에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강조

– 고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동력의 역내 이동을 개선하는 동시에 개별 노동력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

○ 직업 관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개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

– 여성 및 노령층의 노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혜택이 고안되어야 하고 영유아 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함.

– 실업문제 해결은 금융 및 재정위기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양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빈곤 및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안정망 강화, 장기실업자와 노동시장의 연계와 같은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행정개혁) EU 집행위는 회원국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 개혁을 강조

– 행정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통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함.

– 행정의 효율화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운영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를 단순화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경우 기업 운영에 수반되는 관련 부담을 상당부분 덜어줄 수 있음.

○ 금융/재정 위기를 계기로 드러난 각종 금융규제 및 세금제도와 관련 법률 시스템의 문제점이 조속히 개선되면 기존의 제도에서 수반되었던 추가적인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음.

3. 중국의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개혁 전망

■ 2013년 전인대에서 제시된 거시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안정적인 경제성장 지속에 있는바, 향후 중국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초점을 두되 통화 및 신용공급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를 병행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의 주요 경제목표를 안정적인 성장과 물가안정으로 설정하고 2013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를 3.5%로 설정함.

○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언급하는 안정적인 성장의 기준은 전인대에서 제시된 경제성장률 목표치 7.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3.5%가 될 것으로 보임.

- 최근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거 고도성장(2001~11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10.4%)을 견인하였던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보다는 민생개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및 구조조정, 세제 · 호적제도를 비롯한 제도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

■ 하반기에도 중국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인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에 따라, 이를 선제적 ·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7.5%보다 하향하거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5%보다 상향할 경우에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거시경제 정책 대응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가. 재정정책

■ 전인대에서 제시한 적극적 재정정책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를 늘려 민생개선, 경제구조조정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 재정부가 제출한 '2013년 정부 예산안 보고'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2013년 국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12조 7,630억 위안, 13조 9,630억 위안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1조 2,000억 위안으로 2012년(8,000억 위안) 대비 50% 증가함.
- 또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세제개혁 및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구조조정 촉진, 민생개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등이 재정정책의 중점 과제로 추진될 계획임.

○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2013년 예산지출 배분안을 살펴보면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출이 강조되고 있는바, 재정정책의 역점인 민생개선에 집중할 것임.

- 다만 중국정부의 지도부들이 잇따라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최근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된 내용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확대 정책은 제시되지 않을 전망임.

표 14. 중국의 2013년 재정정책 운용 방향

재정정책 중점 과제	주요 내용
재정지출 확대	– 지난해에 비해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난 예산을 편성하여 민생개선, 경제의 지속성장 및 구조조정 지원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
세제개혁 및 감세정책을 통한 경제구조조정 촉진	–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통합 시행 범위 및 시범지역 확대 – 서비스업 발전 및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촉진 – 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 추진 – 비합리적·불법 징수 폐지 – 에너지 및 자원, 주요 부품 및 원재료에 대한 관세 감축
민생개선을 위한 정부지출 구조 개선	– 교육, 보건, 사회보장 등 민생 관련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 – 농업발전·수리사업·국방건설 지원 – 소수민족지역· 변경지역·낙후지역 발전 가속화 – 도농간 통합발전과 도시화 추진 – 일반지출 엄격 관리, 재정·경제 규율 준수 강화, 행정경비지출 축소 – 정부지출 실적 관리 및 효율적 재정지출 강화
경제발전방식 전환 추진과 경제성장의 질 제고	– 국가 중대 과학기술 프로젝트 실행 보장 – 기초연구 및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지원 – 기업의 기술혁신 장려 –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및 서비스산업 현대화 지원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촉진: 신재생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개발 가속화, 주요 지역의 생태보호 강화, 경작지의 삼림전화 가속화, 삼림생태 보호를 위한 보조금·보상 정책 개선

자료: 문익준, 나수엽, 임민경(2013), 「2013년 중국 양회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3-1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나. 통화정책

■ 전인대에서 제시한 안정적 통화정책에 따라 물가안정, 금융리스크 차단을 위해 통화정책을 보다 신중하게 운용할 전망

– M2 증가율의 목표치를 지난해(14%)보다 낮은 13%로 제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금융자원의 합리적 배분, 금융리스크 관리 등이 통화정책의 주요 과제로 대두됨.

○ 하반기에도 금융기관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지속될 것임.

○ 반면에 삼농(농업, 농촌, 농민) 사업, 중소기업 및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은 더욱 확대될 것임.

■ 현재 중국정부는 여전히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인민은행이 5월 9일에 발표한 2013년 1/4분기 통화정책보고서에서 중국경제는 투자 및 수출증가, 고용안정 등에 의해 안정적 성장이 지속되었다고 평가함.

○ 향후에도 투자 및 소비 증대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내생적 성장동력 약화, 높은 사회 인프라 투자비중, 기업 및 지방정부 레버리지 증가,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의 부정적 영향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

- 중국 소비자물가가 1/4분기 중 2.4% 상승에 그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였으나, 해외자본유입 증가, 서비스 및 농산물가격 상승, 에너지가격 등에 대한 정부규제 완화 등이 물가불안요인으로 지적됨.
-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지방정부 채무, 섀도우뱅킹(Shadow Banking)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관리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다. 개혁 방향

■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민생개선, 경제발전 방식 전환 및 구조조정, 세제 · 호적 제도를 비롯한 제도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

- 최근의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여전히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위한 경제개혁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음.

표 15. 2013년 경제체제 개혁의 7대 중점업무

	중점업무	주요 세부 내용
1	행정체제 개혁	- 정부조직개혁 심화 - 심사절차 간소화 - 정부 공공서비스 제공방식의 혁신
2	재정 및 세제개혁	- 정부 예산제도 개선 - 영업세의 증치세(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지역 확대 - 자원세 개혁(석탄 등 과세품목 확대) - 국유기업 개혁(예산 및 수입분배구조)
3	금융체제 개혁	- 금리와 환율의 시장화 개혁의 안정적 추진 - 장외 주식시장의 업무규칙 시스템을 확립하고 중소기업 양도시스템 시범지역 범위 확대, 중소투자자 권리보호체계 확립, 석탄 · 철광석 · 원유 등 상품선물과 국채선물시장 구축 추진 - 예금보호제도 추진
4	투자 및 융자 개혁	- 공정거래를 방해하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금융 · 에너지 · 철도 · 통신 등의 분야에 대한 민간자본의 효과적인 진출 장려 - 철도와 관련된 투자 및 융자 시스템 개혁
5	자원가격 개혁	- 전기세 개혁추진, 전국적인 석탄 거래시장 확립, 천연가스 가격 개혁 추진 -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기세 · 수도세 · 천연가스 등의 차별적인 가격제도 확립
6	민생제도 개혁	- 도시와 농촌의 중대 질병 보험체계를 확립하고 점진적으로 전 국민 의료보호체계를 구축 - 엄격한 생산, 유통, 소비의 식품안전 감독관리체계 구축 - 엄격한 환경보호 관리감독체계와 생태보상제도 건립
7	도시화 추진계획과 도시와 농촌의 통합 관리에 관한 개혁	- 도시화 발전계획을 연구 - 도시의 종합적인 수용능력과 인구이동 상황에 근거하여 호적제도개혁 추진 - 토지관리제도의 안정을 추진하고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개혁을 추진 - 농촌의 생산관리, 등기 제도 등을 확립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 에서 재정리.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5월 25일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4]에서 2013년 경제체제 7대 개혁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

– 7대 개혁 분야로는 행정체제 개혁, 재정 및 세제개혁, 금융체제 개혁, 투자 및 융자 개혁, 자원가격 개혁, 민생제도 개혁, 도시화 추진계획과 도시와 농촌의 통합관리에 관한 개혁 등이 포함됨.

○ 7대 분야에 걸쳐 총 22개 세부내용이 제시되었으며, 각 세부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관련부서를 명시함으로써 향후 관련된 유관부서에서 개혁에 관한 세부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1) 국유기업 개혁 2) 개방형체제 개혁 3) 교육 · 문화 · 의료 등 공공서비스 개혁 4) 혁신체제 개혁 5) 수입분배제도 개혁 등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을 언급함.

4) 关于2013年深化经济体制改革重点工作的意见

4. 일본 아베노믹스의 내용과 평가

■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정부는 엔고 · 디플레이션 극복과 경제성장을 위해 대담한 금융완화정책, 기동적인 재정확장정책, 성장전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정책, 일명 '아베노믹스'를 발표

– (금융정책) 일본은행은 1월에 2% 물가상승 목표를 설정하고 무기한 대규모 자산 매입을 결정한 데 이어 4월 쿠로다 신임총재의 첫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2년 내 2% 물가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격적 금융완화조치를 발표한 바 있음.

○ 일본은행은 1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존의 1% 지향(goal)에서 2% 목표(target)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매월 13조 엔 규모(장기국채 2조 엔, 단기국채 10조 엔)의 무기한 국채매입을 결정함.

○ 4월에는 양적 · 질적 완화정책을 도입하여 통화 공급량을 2년간 2배 확대, 장기국채 매입규모를 연간 50조 엔으로 확대, ETF, J-REIT 등 리스크 자산 매입 확대 등의 정책을 발표함.

표 16. 일본은행의 주요 양적완화조치

2010년 금융완화조치	2011~12년 금융완화조치	2013년 금융완화조치
– 포괄적 금융완화정책 도입(2010년 10월 5일) · 정책금리를 0.1%에서 0~0.1%로 인하 · 자산매입기금 설치: 35조 엔	– 중장기 물가상승률 목표 1% 설정(2011년 3월 14일) – 자산매입기금 증액(2011년 3월 14일, 2012년 2~12월) · 40→65→70→80→91→101(조 엔)까지 증액	– 물가안정목표(2%) 도입(2013년 1월 22일) · 무기한 자산매입방식 도입 – 양적 변화(2013년 4월) · 2년 안에 2% 인플레이션 달성 · 본원통화 공급량: 2년 동안 2배로 확대 · 자산매입프로그램 통합 (자산매입기금 대신 본원통화 기준으로 자금 공급) – 질적 변화(2013년 4월) · 정책목표를 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 · 기존 정책 보완을 넘어선 과감한 시도 단행 · 장기국채 보유잔액: 2년 동안 2배 이상 · 위험도 높은 자산 매입 시도: JREITs, ETFs

자료: 일본은행 및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작성.

– (재정정책) 1월 11일 일본정부는 '일본경제 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하여 재정지출 10.3조 엔 규모의 대형 경기부양책을 제시하였고, 2013년도 예산에서 공공사업비를 15.6%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확대 재정정책을 추진함.

○ 재정지출은 부흥 · 방재대책(3.8조 엔),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3.1조 엔), 생활의 안심 · 지역활성화(3.1조 엔)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공공사업 관련 예산은 지방부담분의 보전과 재해복구비용,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포함한 5.5조 엔으로, 재정지출 규모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음.

– (성장전략) 아베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일본산업 부흥계획, 전략시장 창조계획, 국제화 전략 등 세 가지 계획을 향후 3년간 집중 실시할 예정으로, 6월 초 산업경쟁력회의에서 발표한 세부방안과 일정을 토대로 2013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향후 10년간 실질 GDP 성장률을 2%,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을 매년 3% 이상 끌어올린다는 내용의 성장전략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와 예산 편성, 감세혜택 등 투자활성화 정책을 제시함.

표 17.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비전과 주요 목표

비전	– 향후 10년간 평균 명목 GDP 성장률 3%, 실질 GDP 성장률 2% 실현 – 1인당 국민총소득(GNI, 명목) 매년 3% 성장, 10년 이후 150만 엔 증가 실현
일본 산업 부흥 계획	– 향후 3년간 민간투자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연 70조 엔 수준 회복 – 2020년 세계은행 비즈니스 환경 랭킹 선진국 3위 이내(현재 15위) 진입 – 수퍼 글로벌 대학을 창설하여 향후 10년간 세계대학 순위 100위 안에 10개 이상 진입, 2020년 일본인 유학생 12만 명(2010년 6만 명)으로 배증 – 2020년 20~64세 취업률을 80%(현재 75%)로 확대, 이 중 20~44세 여성 취업률 73%(2012년 수준 대비 5%p 상승) 목표 – 2020년까지 흑자중소기업 · 소규모사업자 140만 사(현재 70만 사)로 배증, 창업률 미국 · 영국 수준인 10%대(2004~09년 평균 4.5%)로 확대
전략 시장 창조 계획	– 2020년 의료관련사업 시장규모 12조 엔(현재 2조 엔)으로 확대 – 2020년 26조 엔 규모(현재 8조 엔) 에너지 시장 획득 – 2020년 6차 산업 시장 규모 10억 엔(현재 1억 엔) 달성 – 2020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금액 1조 엔(현재 4,500억 엔)으로 배증 – 2030년 일본 방문 여행자수 3,000만 명(2012년 837만 명) 달성
국제화 전략	– 2018년 무역의 FTA 비율 70%(현재 19%) 달성 – 2020년 인프라 수출 30조 엔(현재 10조 엔) 달성 – 2020년 중견·중소기업의 수출금액을 2010년의 2배 달성 – 2020년 외국인직접투자 규모 35조 엔(2012년말 17.8조 엔)으로 배증

자료: 제12회 산업경쟁력회의 배포자료를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아베노믹스 지지자들은 양적완화에 따른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이 내수확대로 연결되는 자산효과(wealth effect)를 기대하나, 경제운영을 양적완화에만 의존함으로써 2000년대 초반의 양적완화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팽배

–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급격한 엔화 약세와 주가 상승으로 표출되었고, 2013년 1/4분기 일본의 실질 GDP 역시 수출과 개인소비 증가에 힘입어 1.0%(전기대비) 상승함.

–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변수는 기업의 설비투자라 할 수 있는데, 2013년 1/4분기 현재 5분기 연속 감소함.

○ 2000년대 초반처럼 일본은행이 아무리 본원통화를 늘려도 기업의 투자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통화량 증가에 한계가 있어 기업의 투자의욕이 되살아나지 않는 이상, 생산 · 고용 확대, 임금소득 증가, 소비증가를 통한 진정한 의미의 디플레이션 탈피는 요원할 것으로 보임.

■ 2000년대 초반과 달리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는 재정리스크 증폭과 이에 따른 금융위기의 가능성마저 내포

- 일본은행의 국채매입 확대는 시장에 재정규율 이완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일본정부가 재정적자 구조를 해소할 만한 재정건전화 시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국채금리를 대폭 상승시킬 리스크를 내포함.

○ 국채금리가 폭등할 경우,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는 물론, 그간 자산운용을 국채에 치중한 은행권의 부실화 우려도 제기됨.

※ 일본의 국채(10년물) 금리는 4.4일의 양적완화 발표 직후 0.5%대에서 0.44%로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 0.8~0.9%대로 상승함.

※ 일본국채(발행액: 111.3조 엔)의 투자자별 보유비중(2012년 말): 일본은행 10.4%, 은행 등 예금기관 38.2%, 보험 · 연금기금 23.0%, 해외투자자 7.8%

■ 또한 아베노믹스의 양적완화를 통해 증가한 엔캐리 자금이 해외로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

- 일본의 본원통화량은 2012년 11월 14일 시점의 125.9조 엔에서 2013년 7월 3일 시점에서 173.6조 엔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이렇게 증가한 통화가 고수익을 찾아 신흥국으로 이동하여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각종 금융 및 실물자산의 거품을 창출할 우려가 있음.
- 일본경제 혹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경우 엔캐리 자금이 급속히 회수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음.
- 다만 우리나라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금 중 일본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2013년 5월 시점)은 1.5%와 1.0% 미만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엔캐리 자금의 시장교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성장전략은 양적완화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긴 하나, 현재로선 시장의 우려를 불식할 만한 획기적인 조치가 부족

- 성장전략은 의약품의 인터넷 판매 허용과 국가전략특구 내에서의 규제완화를 제시하였으나 그간 최대쟁점이었던 법인세율 인하와 해고 규제완화, 혼합진료 허용, 기업의 농지소유 자유화는 이번 성장전략에서 제외됨.

○ 주요국의 실효법인세율(2013년 1월): 일본 35.64%(재해복구세 포함 시, 38%), 미국 40.75%(오바마 행정부, 28%로 인하 추진), 독일 29.55%, 중국 25%, 한국 24.2%, 싱가포르 17.0%

○ 혼합진료란 의사가 공적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진료와 그렇지 않은 진료를 병행하는 것으로서, 일본의사회가 의료의 소득 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반대

○ 기업의 농지 임대는 2009년부터 전면 허용되었으나, 농지 취득은 기업이 농가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불가능

Ⅲ. 2013년 하반기 주요 지역별 경제전망

1. 선진 경제

가. 미국

1) 경제 동향

■ 2013년 1/4분기 실질 GDP가 시장예상치에 비해 낮은 전기대비 연율 1.8% 성장

- 민간소비지출과 민간투자가 각각 연 2.6%, 7.4%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연방정부지출이 2012년 4/4분기 -7.0%에 이어 -4.8%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지속한 데 기인

표 18. 미국의 경제성장률(지출부문별)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연간	1/4
실질 GDP	1.8	2.0	1.3	3.1	0.4	2.2	1.8
소비지출	2.5	2.4	1.5	1.6	1.8	1.9	2.6
민간투자	5.2	6.1	0.7	6.6	1.3	9.8	7.4
기업투자	8.6	7.5	3.6	-1.8	13.2	8.0	0.4
주택투자	-1.4	20.5	8.5	13.5	17.6	12.1	14.0
수출	6.7	4.4	5.3	1.9	-2.8	3.4	-1.1
수입	4.8	3.1	2.8	-0.6	-4.2	2.4	-0.4
정부지출	-3.1	-3.0	-0.7	3.9	-7.0	-1.7	-4.8

주: 전기대비 연율 기준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13년 6월 26일).

■ 고용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 그 속도는 완만하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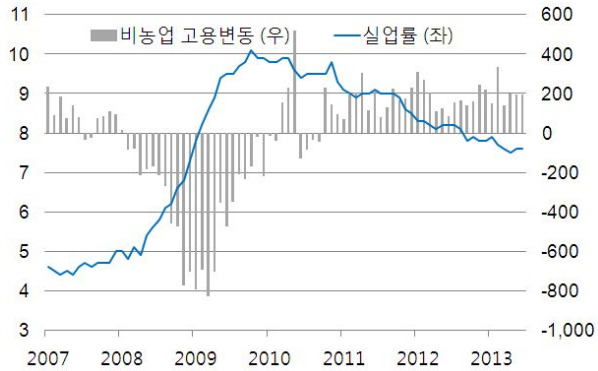
- 연초 7.9%였던 실업률이 6월 7.6%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비농업부문취업자수(1~6월)도 평균 20.2만 명으로 고용 증가세는 지속

○ 6월 비농업부문취업자수가 시장예상치(16.5만명)를 상회한 19.5만 명 증가하는 등 고용 호조세를 시현하였으며, 이 중 민간부문 고용은 20.2만 명 증가한 반면, 시퀘스터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공공부문 고용은 전월에 이어 7천 명 감소

-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1~6월)는 평균 35.1만 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평균 37.5만 건에서 2.4만 건 하락하였으며, 7월 셋째 주(7월 19일)도 34.3만 건으로 하락세를 보여 고용시장 회복세에 대한 기대 증가

그림 16. 비농업부문 고용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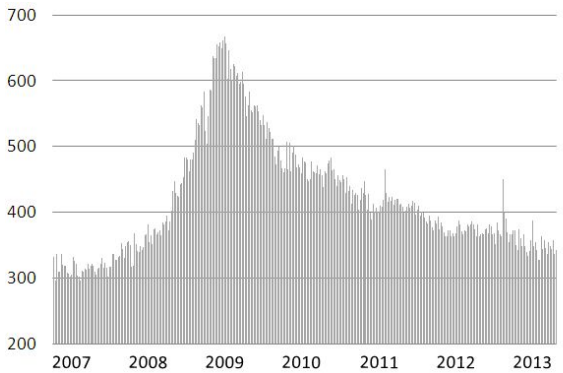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13년 7월).

그림 17.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단위: 천 명)



자료: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2013년 7월).

■ 주택시장의 경기회복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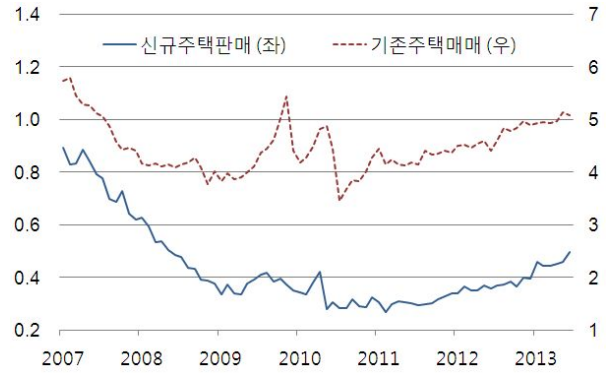
- 신규주택판매(1~6월)는 전년동기대비 29.1% 증가한 연 45.9만 채이며 기존주택판매(1~6월)도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한 500.3만 채로 증가세를 시현

○ 최근 신규주택판매(6월)는 연 49.7만 채로 전월대비 8.3%(전년동월대비 38.1%) 상승하였으며, 기존주택판매도 연 508만 채로 전월대비 -1.2% 감소(전년동월대비 15.2%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

- S&P/Case-Shiller 20대 도시 주택가격지수(1~4월)는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평균 148.4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4월에도 전월대비 2.5%(전년동월대비 12.1%) 증가한 152.37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

그림 18. 신규 및 기존 주택가격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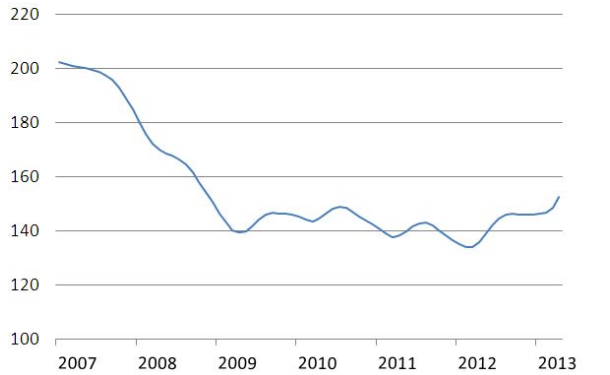
(단위: 백만 채)



자료: 전미부동산협회(2013년 7월).

그림 19. S&P/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

(단위: 2000년 1월=100)



자료: Case-Shiller(2013년 6월).

■ 소비지표는 점진적인 회복세

- 소매판매(1~6월)는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지난 6월에도 전월대비 0.4%(전년동월대비 5.7%)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금감면 혜택 종료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2013년 1월(0.1%/4.5%)→2월(1.1%/4.3%)→3월(-0.3%/3.2%)→4월(0.1%/3.7%)→5월(0.5%/4.4%)→6월(0.4%/5.7%)

-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6월)도 전월 74.3에서 81.4로 3개월 연속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미시건대학 소비자심리지수(7월)는 전월 77.8에 73.8로 2개월 연속 상승에서 하락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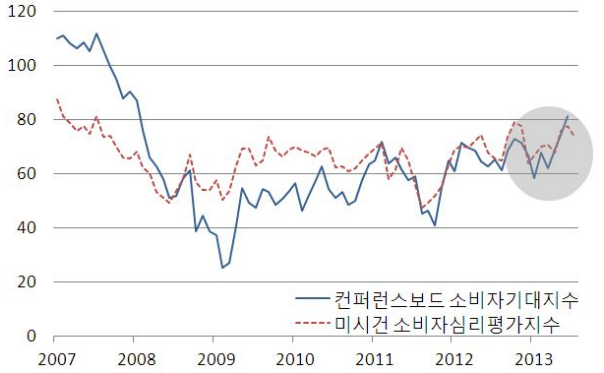
그림 20. 소매판매지수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2013년 7월).

그림 21. 소비자심리지수

(단위: 1985년=100)



자료: 컨퍼런스보드, 미시건대학(2013년 7월).

■ 제조업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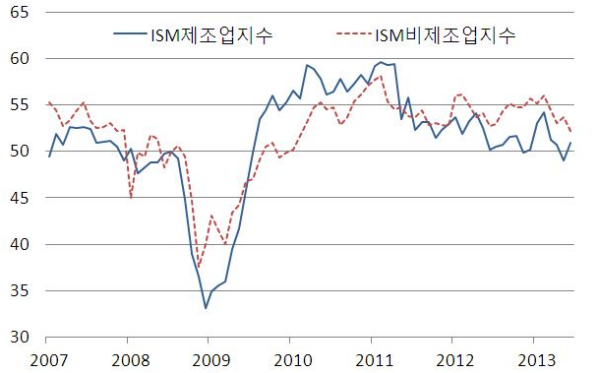
- ISM 제조업활동지수는 2월 54.2에서 3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 6월에는 전월 49에서 50.9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ISM 서비스업지수 또한 지난 2월 이후 하락추세에 있어 전반적인 성장세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ISM 제조업활동지수는 제조업체의 구매담당자가 느끼는 경기를 지수화한 것으로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 50 미만이면 경기의 수축을 의미

- 산업생산지수(1~6월)는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여 지난해 동기간 4.2%에 비해 확장세가 둔화되었으며, 6월에도 전월대비 0.3%(전년동월대비 2.0%)로 예상에 비해 부진한 모습

그림 22. ISM 제조업 및 비제조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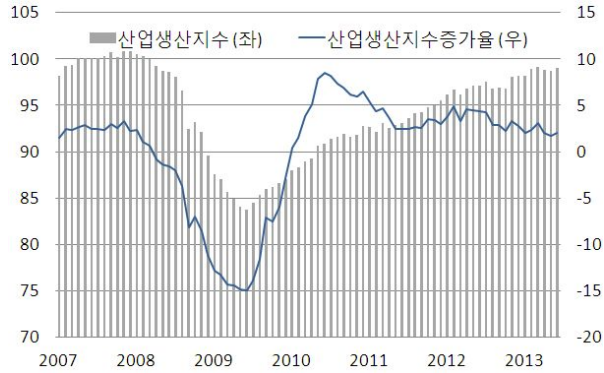
(단위: 지수)



주: 50 이상은 경기 확장, 이하는 수축을 의미함.
자료: 미국 공급관리협회(7월).

그림 23. 산업생산활동지수

(단위: 2007년=100, %)



주: 전년동월대비.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6월).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연준의 출구전략은 양적완화정책 축소, 양적완화정책 종료, 기준금리 인상 등 3단계로 시차를 두고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버냉키 의장이 언급한대로 하반기부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버냉키 연준 의장은 지난 5월 22일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지표 개선 여부에 따라 채권매입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언급한 데 이어 FOMC 6월 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지속하였던 양적완화정책의 축소 및 종료 시점을 제시
  - ○ 다만 미국 경제가 연준의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전제하에 올해 하반기에 양적완화정책을 축소한 후 2014년 중반에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
- 연준의 출구전략 시행의 1단계는 금융위기 당시 시행했던 세 차례 양적완화정책으로 인해 대폭 증가된 연준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이며, 2단계는 양적완화 종료 이후에 금융기관 내에 있는 과잉 유동성 흡수, 마지막으로 3단계는 기준금리의 인상임.
  - ○ 연준이 제3차 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현재의 초저금리 유지기간을 2015년 중반까지 유지하기로 공약하였으나, 그 구체적 시기는 향후 경제상황과 차기 연준 의장의 정책 기조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9. 2013년 FOMC 정기회의 일정 및 내용

일시	정책금리	할인율	주요 의결사항 및 내용
1월 29~30일	0~0.25%	0.75%	- 기존 통화정책 유지 재확인 ▸ 매월 모기지 증권 400억 달러, 장기 국채 450억 달러씩 매입, 모기지 증권 등 만기 회수분 재투자 등 지속 ▸ 제로금리는 1~2년 예상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는 한 실업률이 6.5%로 하락할 때까지 유지
3월 19~20일	0~0.25%	0.75%	- 기존 통화정책 유지 재확인 -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전망 하향 조정 ▸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2년 12월 회의 당시 2.3~3.0%에서 2.3~2.8%로, 2014년 전망치는 3.0~3.5%에서 2.9~3.4%로 하향 조정 ▸ 2013년 4/4분기 실업률 전망치 7.4~7.7%에서 7.3~7.5%로 하향 조정. 2014년 4/4분기 전망치는 6.8~7.3%에서 6.7~7.0%로 하향 조정
4월 30~5월 1일	0~0.25%	0.75%	- 기존 통화정책 유지 재확인 ▸ **고용시장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자산매입의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등 속도를 조절할 준비(새로 추가된 부분)** - 완만한 경제성장 지속 예상. 경제전망 하방 위험 상존 ▸ 3월 회의 이후 경제활동 완만한 회복 지속. 고용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 가계 소비지출 및 기업 고정투자는 개선되고 주택부문은 보다 호전
6월 18~19일	0~0.25%	0.75%	- 기존 통화정책 유지 재확인 -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실업률 전망 하향 조정 ▸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월회의 당시 2.3~2.8%에서 2.3~2.6%로 하향조정, 2014년 전망치는 2.9~3.4%에서 3.0~3.5%로 상향 조정 ▸ 2013년 실업률 전망치 7.3~7.5%에서 7.2~7.3%로 하향 조정. 2014년 전망치는 6.7~7.0%에서 6.5~6.8%로 하향 조정 ▸ 2013년 개인소비지출(PCE)인플레이션 전망치 1.3~1.7%에서 0.8~1.2%로 하향 조정. 2014년 전망치는 1.5~2.0%에서 1.4~2.0%로 하향 조정

주: 2012년 12월 FOMC 회의에서는 장기국채 월 450억 달러씩 추가 매입과 실업률, 인플레이션 목표 설정(실업률 6.5%, 인플레이션 2.5%때까지 제로금리 유지) 등을 발표
자료: 미국 연준.

■ 시퀘스터 등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한 의회의 갈등과 대립은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 과정에서도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결국 조건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

- 만약 연방정부 채무한도 상향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의 국제적인 신용하락 및 위상저하, 자금조달비용 인상, 경기회복세 지연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상존하므로, 양당간 재정적자 감축노력은 의회의 여름 휴회기간 전에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재정건전화 방안이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도 미국에서는 지속적인 국가채무한도 상향조정 논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함께 정부의 건강 및 연금 프로그램의 급증도 재정건전화 문제에 난제로 부각

3) 2013년 경제전망

■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 시행되었던 양적완화정책의 축소 및 종료 논의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특히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수정하였는데, 의회 청문회(7월 18~19일)에서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를 근거로 구체적인 양적완화 축소 시점을 판단하기에는 경기지표 결과가 애매하고 부진하다고 언급

○ 버냉키 의장은 기자회견(6월)에서 미 경제가 연준 전망대로 간다면 하반기에 양적완화 규모 축소를 시작하여, 내년 중반쯤 중단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의회 청문회(7월)에서 미국경제는 실업률이 높은 상황이며 물가도 연준의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당분간 경기부양책 지속을 강조

- 따라서 양적완화 축소 및 종료는 경기회복 속도에 따라 시행될 것이며, 프로그램이 시작되더라도 미국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판단되나, 시행 논란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이 반복될 가능성

■ 2013년 미국경제는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기존 전망[5]에 비해 전반적으로 대내적인 미국경제의 체질은 개선되나 유럽재정위기 부진, 중국경제 둔화 등과 같은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경제의 회복세를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
- 주택경기 회복, 고용시장 개선 등으로 중장기적인 경기회복세를 견인하겠지만, 시퀘스터 영향으로 인해 2/4~3/4분기 경제성장률은 둔화될 전망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의 절반은 저임금계층이므로, 견조한 소비회복세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울 전망
-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 지표도 개선됨에 따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는 있으나, 국가채무한도 상향과 관련된 양당의 협상, 중국경제 둔화 및 EU 경기부진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
- 세제개혁 및 사회복지 축소와 국가채무한도 상한협상 등과 관련된 양당 간 정치적인 합의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미국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도 존재

5) 재정절벽 문제가 원만히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1.8%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2012년 10월 전망)

나. EU

1) 경제 동향

■ EU/유로존은 2013년 1/4분기 −0.1%/−0.2%의 GDP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모든 회원국이 동반침체

- 재정위기의 여파로 인해 EU/유로존은 현재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럽 경기를 지탱하였던 북부유럽의 경기도 크게 둔화된 상황임.

○ (독일) 유로존 긴축에 따른 역내수출 감소를 소비와 투자가 상쇄치 못하면서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임.

○ (프랑스) 실업률 및 세금의 상승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가 둔화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투자 역시 위축된 상황임.

○ (영국) 무역수지 적자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서도, 가계소비 개선의 영향으로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이탈리아) 내수가 전례 없이 위축된 가운데, 정치 불안이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기업의 투자 역시 경기회복을 제한하는 양상임.

○ (스페인) 생산비 축소 노력 등으로 경상수지는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내수가 부진하고, 실업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함 (2013년 4월: 26.8%).

표 20.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연간	1/4
EU 27	1.6	0.0	−0.2	0.1	−0.5	−0.3	−0.1
유로존	1.5	−0.1	−0.2	−0.1	−0.6	−0.6	−0.2
독일	3.0	0.6	0.2	0.2	−0.7	0.7	0.1
프랑스	2.0	0.0	−0.2	0.1	−0.2	0.0	−0.2
이탈리아	0.4	−1.0	−0.6	−0.3	−0.9	−2.4	−0.6
스페인	0.4	−0.4	−0.4	−0.3	−0.8	−1.4	−0.5
영국	1.0	−0.1	−0.4	0.9	−0.3	0.3	0.3

주: 전기대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확장적 재정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부채조정과 이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 및 고실업이 EU/유로존 경기침체 지속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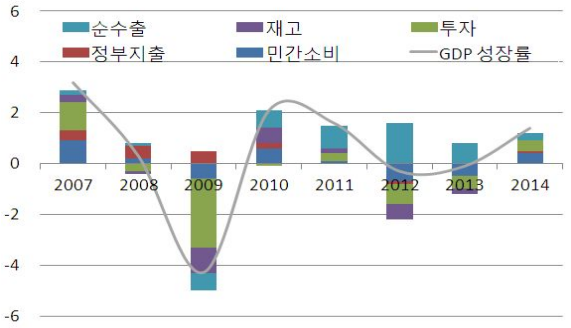
- 재정긴축과 민간부문의 부채조정(Deleveraging)은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2013년 1/4분기 EU/유로존의 내수 증가율은 6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 내수부진은 재정위기를 겪고 있거나 긴축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역내교역 및 금융거래 비중이 높은 EU/유로존의 특징상 동반침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음.

○ 민간부문의 부채조정은 별도의 경제적 충격 없이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이른바 '대차대조표상의 불황'을 일으키면서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계속 진행 중임.[6)]

그림 24. EU의 부분별 GDP 성장기여도

(단위: %p)



주: 2013년과 2014년 자료는 EU 집행위원회 전망치이며, 연간 GDP 성장률 단위는 %임.
자료: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표 21. EU/유로존 분기별 내수증가율

(단위: %)

		EU 27	유로존
2011년	1/4	0.3	0.6
	2/4	0.1	−0.1
	3/4	0.0	−0.2
	4/4	−0.8	−0.9
2012년	1/4	−0.2	−0.4
	2/4	−0.6	−0.8
	3/4	−0.2	−0.4
	4/4	−0.5	−0.7
2013년	1/4	−0.1	−0.3

주: 전기대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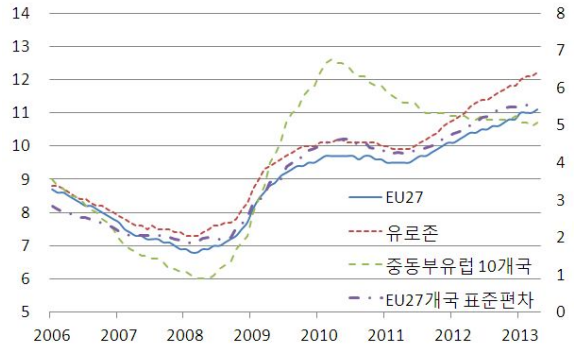
– EU(특히 유로존)의 고용지표는 남유럽을 중심으로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실업률은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이원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 2013년 4월 EU/유로존 실업률은 각각 11.0%/12.2%로 여전히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음.

○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EU 회원국 간의 실업률 격차가 커진 바 있는데, 최근의 경기동조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며(그림 25 참고), 일부 국가(스페인, 그리스)의 청년실업률은 50%를 상회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림 25. EU/유로존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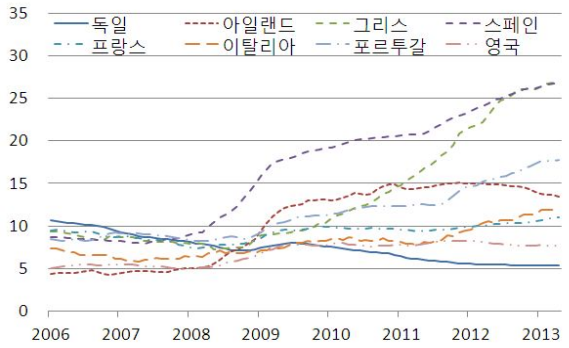
(단위: %)



주: EU 27, 유로존, 중동부유럽 10개국의 실업률은 좌측 Scale기준이고, EU 27국(실업률) 표준편차는 우측 Scale기준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26. EU 주요국의 실업률 추이

(단위: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6)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은 민간부문이 부채감축 노력을 지속하면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따라서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자금흐름과 자산의 가치까지 악화되는 등 결과적으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노무라 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리처드 쿠(Richard C. Koo) 등이 주장함.

■ 유로화 약세, 역외수요 회복 및 수입수요 감소에 따른 유로존 무역 · 경상수지의 흑자 기록에도 불구, 내수부진 상쇄에는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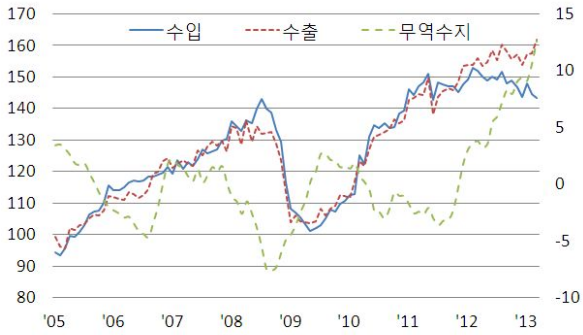
- 유로존의 무역수지는 2011년 말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최근에는 흑자폭이 증가하는 추세로 GDP 항목 중 순수출 항목만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음.

○ 대부분의 유로존 국가에서 무역수지가 개선되면서 유로존의 무역수지는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유로존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회원국 간의 경상수지 불균형은 크게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수출이 남부유럽의 성장동력을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그림 27. 유로존의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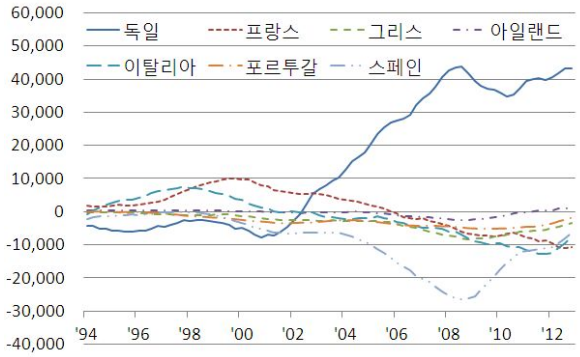
(단위: 10억 유로)



주: 수출과 수입은 좌측 Scale기준이고, 무역수지는 우측 Scale 기준이며, 무역수지의 경우 4분기 평균이동선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그림 28. 유로존 회원국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백만 유로)



주: 8분기 이동평균 자료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침체기조인 실물경기와 달리 금융시장은 상대적 안정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모습

-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OMT) 발표(2012년 9월) 이후 ECB가 지속적인 경기부양의지를 보임에 따라 2013년 5월까지 금융시장은 전반적인 상승 · 안정세를 보여 왔음.

○ ECB의 OMT 발표 이후 국채 및 주식시장은 키프로스 사태, 이탈리아 총선 이슈 등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며, 주식시장은 2013년 5월 초 ECB의 기준금리 인하(0.75% → 0.5%) 등에 힘입어 5월 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짐.

- 그러나 6월 19일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미국의 양적완화정책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ECB가 확장적 통화정책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금융위기의 형태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으나, 미국의 양적완화 스케줄과 더불어 실물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변동성 확대에 따른 위기발생 리스크도 상존함.

2) 정책 현안 및 방향

■ EU/유로존의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으로 긴축정책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 지난 5월 EU 집행위원회는 6개 회원국 재정적자 목표치(GDP 3% 수준) 달성 시한 연장 및 4개국의 재정감독절차(Excessive Deficit Procedure) 종료를 골자로 하는 정책권고안을 발표하였으며, 6월 21일 열린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공식 승인함.
  - ○ 프랑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폴란드에 대해서는 2년씩, 포르투갈, 네덜란드에 대해서는 1년씩 감축시한이 연장됨.
  - ○ 이탈리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헝가리 등 5개 EU 회원국에 대해서는 이른바 재정감독절차 종료가 권고됨으로써, 긴축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계기가 마련됨.
- 한편, 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들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시한 방안(The Commission's Country-Specific Recommendations)에 대해서, 6월 27일~28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이를 공식 지지하고 관련 구조 개혁들을 진행해 나가기로 함.

■ 유로존의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유럽중앙은행(ECB)은 당분간 확장적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

- ECB는 2013년 5월 기준금리를 인하(0.75% → 0.5%)[7]한 데 이어 중소기업을 위한 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y) 발행 및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힘.
  - ○ 2013년 6월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ECB 드라기(M. Draghi) 총재는 ABS 발행 및 마이너스 예금금리 적용을 당장 진행하지 않더라도 주요 경제지표 및 시장반응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할 수 있음을 밝힘.
- 유로존 실물경기의 뚜렷한 회복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ECB의 경기부양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8]

■ EU는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규제 및 조세집행 강화를 통해 누락된 조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적자 개선 및 추후 경기개선을 위한 정책여력을 마련할 계획

-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2월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30여개의 제안을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함.
  - ○ EU의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약 19%에 이르는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탈세규모가 약 1조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세집행의 강화를 통한 세수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함.
- 2013년 5월 EU 집행위원회 및 각국 정상들은 조세수입을 담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역내 '은행계좌정보자동교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함.
  - ○ 동시에 EU 집행위원회는 EU 역외국가인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와 은행계좌정보교환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는 계획임.

---

7) ECB는 기준금리를 2013년 5월 0.5%로 인하하였으며 이후 2013년 6월과 7월 모두 같은 수준을 유지함.
8) 실제로 2013년 7월 4일 실시된 ECB 정책위원회(Governing Council)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드라기(M.Draghi) 총재는 경제상황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이밖에도 내년까지 EU는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최소한의 조세기준을 마련하도록 협의하는 것은 물론 자회사-모회사 관련 지침개정을 통해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및 탈세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임.

3) 2013년 경제전망

■ 남부유럽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내수침체와 유로존의 경기동조화 현상을 고려할 때 긴축조절과 ECB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크게 개선되지 못할 전망

- 일부 회원국의 긴축완화 가능성과 ECB의 양적완화 기조를 감안할 때 경기부양에 양호한 여건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경기침체의 폭과 성격(부채조정)을 고려할 때 획기적으로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음.

○ 긴축완화가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EU 차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개혁도 결실을 보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단,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양호하고 대외수출 비중이 높은 북부유럽을 중심으로 하반기 이후 경기개선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유럽도 점차 경기저점에 도달, 전체 EU/유로존 경기가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유로존 경제는 -0.6% 수준의 저성장을 전망

- 2013년 유로존 경제는 재정건전화 시한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과 내수부진의 영향이 여전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민간의 부채조정 및 그에 따른 내수부진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거의 없고, EU 집행위의 경쟁력 제고방안 역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한바, 2013년 유로존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재정긴축 완화에 따라 2013년 하반기에는 정부부문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2013년 연간 성장률은 2012년 -0.6%보다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22. 주요 기관별 EU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	OECD		EU 집행위원회		IMF		Oxford Economics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2012	2013
유로존	-0.6	-0.5	-0.6	-0.6	-0.4	-0.6	-0.6	-0.5	-0.7
독일	0.3	0.9	0.4	0.7	0.4	0.9	0.3	0.8	0.3
프랑스	-0.3	0.0	-0.3	0.0	-0.1	0.0	-0.2	0.0	-0.3
이탈리아	-1.8	-2.4	-1.8	-2.4	-1.3	-2.4	-1.8	-2.4	-1.8
스페인	-1.7	-1.4	-1.7	-1.4	-1.5	-1.4	-1.6	-1.4	-1.7
영국	0.7	0.3	0.8	0.3	0.6	0.3	0.9	0.3	1.0

주: 2012년은 각 기관 실적치, 2013년은 각 기관 전망치임.
자료: KIEP, OECD(2013년 5월), EU 집행위원회(2013년 6월), IMF(2013년 7월), Oxford Economics(2013년 6월).

다. 일본

1) 경제 동향

■ 일본경제는 2013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0%(전년동기대비 0.4%)를 기록하여 완만한 경기회복세 시현

– 설비투자가 침체된 반면, 개인소비, 주택투자 등 가계부문 호조, 정부지출 등 공공부문 실적개선, 재화·서비스 수출 호조로 인해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0%를 기록, 2012년 4/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 개인소비는 소비자심리 개선, 신차판매 호조로 2분기 연속 증가(0.1%→0.7%)

○ 설비투자는 기계설비투자, 소프트웨어 투자 위축으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2.4%→–0.3%→–3.3%→–1.5%→–0.3%)

표 23. 일본의 경제성장률(지출부문별)

(단위: %)

	2011년도 실적	2012년도 실적	분기별 실적				
			2012 1Q	2012 2Q	2012 3Q	2012 4Q	2013 1Q
실질 GDP	0.2	1.2	1.2	–0.2	–0.9	0.3	1.0
개인소비	1.4	1.2	0.6	–0.2	–0.7	0.1	0.7
주택투자	3.7	5.3	–1.5	2.3	1.5	3.5	1.9
설비투자	4.1	–1.4	–2.5	–0.2	–3.3	–1.5	–0.3
정부지출	1.4	2.2	1.5	0.2	0.4	0.7	0.4
공공투자	–2.2	15.0	7.0	6.3	3.2	2.7	0.4
수 출	–1.6	–1.3	2.7	0.0	–4.4	–2.9	3.8
수 입	5.3	3.8	2.0	1.8	–0.3	–2.2	1.0

주: 연간 단위는 회계연도 기준(해당연도 4월~익년 3월), 전기대비
자료: 일본 내각부(2013년 6월 10일).

■ 2013년 상반기 일본경제는 생산, 수출, 실업률, 물가 등 대부분의 지표 개선

– 생산은 2013년 상반기 광공업생산이 전월대비 1% 전후의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국면에 접어들었음.

–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월 6.3%, 2월 –2.9%, 3월 1.1%, 4월 3.8%, 5월 10.1%, 6월 7.4%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엔저로 인한 수입연료 가격 상승으로 수입 또한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적자기조를 유지함.

– 실업률은 2013년 1~5월에 4% 초반을 유지하다가 6월 3.9%를 기록하는 등 개선세를 보임.

○ 평균 실업률: 2010년 5.1% → 2011년 4.6% → 2012년 4.3% → 2013년 상반기 4.1%

– 물가는 2013년 1~4월에 전년동기대비 –0.2~–0.5% 사이의 디플레이션을 유지하다가 5월에 동 0.0%를 기록하여 7달 만에 물가하락세가 진정된 후 6월 동 0.4%로 13개월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 기조 탈피

표 24.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2012년								2013년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성장	분기별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3.9	3.9	0.2	0.2	0.2	0.4	0.4	0.4	0.4	0.4	0.4	-	-	-
경기	동행지수	95.8	94.1	93.8	93.5	91.5	90.7	90.2	92.6	91.6	92.4	93.8	95.3	106.0	-
	선행지수	95.2	93.2	93.0	93.2	91.6	92.8	92.1	93.4	95.0	97.6	97.9	99.0	110.7	-
산업활동	광공업생산 (전월대비, %)	-3.4	0.4	-1.0	-1.6	-4.1	1.6	-1.4	2.4	0.3	0.6	0.9	0.9	1.9	-
	출하 (전월대비, %)	-1.3	-0.9	-3.1	0.2	-4.3	-0.1	-0.8	4.0	-0.3	1.4	1.2	-1.4	1.0	-
	재고 (전월대비, %)	-0.7	-1.2	2.9	-1.6	-0.9	-0.1	-1.2	-1.2	-0.4	-2.0	0.2	0.8	-0.4	-
대외거래	무역수지 (십억 엔)	-907	56	-528	-768	-568	-556	-957	-645	-1,633	-781	-366	-881	-994	-181
	수출(십억 엔)	5,236	5,641	5,312	5,044	5,357	5,148	4,983	5,298	4,798	5,283	6,270	5,776	5,767	6,061
	수입(십억 엔)	6,144	5,585	5,840	5,812	5,926	5,704	5,940	5,944	6,432	6,064	6,637	6,658	6,761	6,242
고용	실업률	4.4	4.3	4.3	4.2	4.2	4.2	4.1	4.2	4.2	4.3	4.1	4.1	4.1	3.9
물가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0.1	-0.2	-0.3	-0.3	-0.1	0.0	-0.1	-0.2	-0.2	-0.3	-0.5	-0.4	0.0	0.4
	(전월대비, %)	-0.2	-0.3	-0.2	0.2	0.2	0.0	-0.3	-0.1	-0.3	0.1	0.3	0.3	0.2	0.0

주: 1)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는 2005=100을 기준, 2013년 5월은 2010=100 기준.
2) 소비자물가는 신선식품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 기준.
자료: 일본 내각부, 총무성 통계국 등 각 기관 발표자료 참고.

2) 정책 현안 및 방향

■ 통화정책은 4월 일본은행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발표한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본원통화를 연 60조~70조 엔 확대하기 위한 자산매입을 골자로 한 양적완화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면서 0~0.1%의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 중 추가 완화책 제시 가능성도 존재함.

■ 재정정책은 재정지출 10.3조 엔 규모의 대형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해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骨太の方針)에 의거하여 하반기 중으로 '중기재정계획'을 구체화할 예정

- 재정지출은 부흥·방재대책(3.8조 엔), 성장에 의한 부의 창출(3.1조 엔), 생활의 안심·지역활성화(3.1조 엔)로 구성됨.
- 재정건전화 실현을 위해 중앙·지방정부의 명목 GDP 대비 기초 재정수지 적자비율을 2015년까지 2010년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흑자 전환하는 목표를 제시함.

○ 2012년 가결된 소비세 인상안(2014년 4월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1차 인상)에 대해서는 경기동향을 주시하면서 올해 10월 중에 인상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힘.

■ 성장전략은 법인세율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촉진, 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구체적 규제완화 · 세제혜택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구조개혁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전망

- 아베 총리는 가을 임시국회를 '성장전략 실행국회'로 명명하고, 기존의 성장전략을 보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혜택 등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한 '2차 성장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 아베 총리는 과감한 설비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 감세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를 촉진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법안'(가칭)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요미우리신문』 6월 10일자).
- TPP 전략은 일본정부가 7월 2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TPP 협상에 처음으로 정식 참여하여 TPP 협상이 본격화될 예정임.

3) 2013년 경제전망

■ 2013년 일본경제는 ①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민간수요 회복 ② 해외경제 회복 및 엔약세로 인한 수출 개선 등에 힘입어 연간 1.5% 수준의 성장률이 예상

- 개인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신차판매대수 호조로 2013년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2%(전기대비 0.7%) 증가하였으며, 2014년 2분기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시점까지 가수요 등의 효과로 증가기조는 지속될 전망
- 고정투자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이 더딘 가운데 전산업 차원의 설비투자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경기부양책에 따른 공공투자 증가로 총 1% 내외 성장률 전망

○ 3월 단칸지수에 의하면 2013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제조업 3년 만에 감소, 비제조업 2년만의 감소로 전산업 차원의 감소가 예상되었으나, 6월 단칸지수에서 2013년도 설비투자 계획은 투자금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남.

- 재화 · 서비스 순수출은 해외경제 회복 및 엔약세에 따라 수출이 개선되어 전년대비 소폭 증가세 전망
- OECD(2013년 5월)는 일본경제가 2013년에 1.6%, UN(2013년 6월)은 1.3%, IMF(2013년 7월)는 2.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일본 정부(2013년 1월)와 일본은행(2013년 4월)은 2013년도 GDP 성장률을 각각 2.5%, 2.9%로 기대하고 있는바(2013년 4월~2014년 3월 기준), 실제 아베노믹스의 실물경제 파급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고 있어 다소 낙관적이라는 견해도 있음.

표 25. 주요 기관별 일본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KIEP	IMF	OECD	UN	Global Insight	EIU	일본정부	일본은행
2013년	1.5	2.0	1.6	1.3	1.0	1.2	2.5	2.9

주: 1) 전망시점은 일본정부(1월), 일본은행(4월), OECD · Global Insight · EIU(5월), UN(6월), IMF(7월) 기준으로 작성.
2) 일본정부, 일본은행은 해당년도 4월~익년 3월 기준, 그 외는 해당년도 1~12월 기준.
자료: 각 기관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로 작성.

■ 2013년 하반기는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일본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중국 경제성장 부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출구전략 실시 등 해외 경제변수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리스크에 직면

- 2013년 고용환경은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디플레이션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임.

○ 대지진 이후 복구를 위한 일자리 수요가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2013년 하반기 실업률은 4.0%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

- 일본 금융시장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불안감과 해외경제변수 등에 따라 증시, 엔/달러 환율, 시중금리 등의 변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본격적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등 해외 변수로 인해 조정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2. BRICs 경제

가. 중국

1) 경제 동향

■ 2013년 2/4분기 GDP 성장률이 7.5%로 3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발생

- 2013년에는 경기 회복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대다수였으나, 회복세가 계속 지연되고 정부의 목표치인 7.5%를 하회할 우려가 커지면서 경착륙 위험성 확산
- 전체적으로 실물경기 회복세가 다소 둔화되면서, 당분간 경기가 크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주요 원인은 불확실한 대외환경으로 생산 및 투자 부진 등의 경기요인과 반부패정책, 경제개혁 추구 등의 정책 요인임.

표 26.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

구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전체	1/4	2/4	상반기
GDP	8.1	7.6	7.4	7.9	7.8	7.7	7.5	7.6
산업생산	11.6	9.5	9.1	10.0	10.0	9.5	9.1	9.3
소매판매	14.8	13.9	13.5	14.9	14.3	12.4	13.0	12.7
고정투자	20.9	20.4	20.5	20.6	20.6	20.9	20.1	20.1
수 출	7.6	10.5	4.5	9.4	7.9	18.4	4.2	10.4
수 입	6.9	6.5	1.5	2.8	4.3	8.4	5.3	6.7
CPI	3.8	2.9	1.9	2.1	2.6	2.4	2.4	2.4
M2	13.4	13.6	14.8	13.8	13.8	15.7	14.0	14.0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

■ 산업생산은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면서 회복세가 지연

- 2013년 상반기 산업생산 증가율은 9.3%로 2012년 평균 10.0%에 비해 하락했으며, 4월, 5월, 6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9.3%, 9.2%, 8.9%로 완만한 둔화세를 지속

○ 6월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제조업 PMI 지수는 50.1로 9개월 연속 확장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HSBC 구매자 관리지수(PMI)는 48.3로 9개월 이래 최저치임.

■ 2013년 소비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투자도 작년보다 다소 둔화

- 2013년 상반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2.7%로 2012년 평균 14.3%보다 둔화추세이며, 반부패정책으로 인한 정부소비의 감소가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13년 상반기 고정투자 증가율은 20.1%로 2012년 평균 20.6%보다 다소 하락하였으며, 기초인프라에 대한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기기계, 열에너지에 대한 투자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 2013년 들어 호조를 보이던 수출은 5, 6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축소

- 2013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10.4%로 2012년 평균 7.9%에 비해 상승했으나, 6월에는 정책당국의 외자 유입 규제조치와 위안화 절상 영향으로 마이너스인 -3.1%를 기록
  - ○ 수출증가율: (4월) 14.7% → (5월) 1.0% → (6월) -3.1%
  - ○ 수입증가율: (4월) 16.8% → (5월) -0.3% → (6월) -0.7%
- 상반기 수출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만(27.4%), 아세안(22.58), 홍콩(42.7%) 등이 증가하였고, 선진국인 EU(-3.9%), 일본(-3.8%), 미국(1.8%)은 부진
  - ○ 특히 대홍콩 수출통계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핫머니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면서 5, 6월에는 증가폭이 크게 감소함.
  - ○ 대홍콩 수출증가율: (3월) 92.9% → (4월) 57.1% → (5월) 7.7% → (6월) -6.9%

■ 물가는 식품가격이 하락하면서 안정세

- 2012년 2.6%를 보이던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상반기에도 2.4%를 기록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 3.5%를 하회하고 있음.
  - ○ 2013년 상반기 채소(2.3%), 돼지고기(-3.7%) 등의 식품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체적인 물가도 안정세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적극적인 재정정책' 의 기조에 따라 신형 도시화에 따른 기초 인프라 위주의 투자확대정책 등을 전망

- 중국 정부가 제시한 2013년 국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은 각각 12조 7,630억 위안, 13조 9,630억 위안이며, 재정적자 규모는 1조 2,000억 위안으로 2012년(8,000억 위안) 대비 50% 증가함.
  - ○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신형도시화 정책에 따라서 기초 인프라의 투자확대가 계속되고, 민생 관련 분야에 대한 지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계획된 재정확대정책 이외에 추가적인 단기 경기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전망임.
  - ○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모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지속가능한 성장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현재 희생이 불가피함을 강조함.

■ ‘안정적인 통화정책’의 기조에 따라 통화정책은 신중하게 운용할 전망

- 6월 24일 발표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그동안의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금융완화정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함.
  ○ 6월 19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거시정책의 안정성과 연속을 강조하였고, 최근의 신용경색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단기금리 급증과 증시 폭락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중국 소비자물가가 상반기 중 2.4% 상승에 그치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약화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동산 가격 안정 필요성, 물가상승 압력,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구조조정 등으로 추가완화정책이 쉽지 않음.
  ○ 그러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올해 목표치인 7.5%를 크게 하회하거나 미국의 출구전략 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충격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통화 완화정책을 고려할 전망임.

3) 2013년 경제전망

■ 2013년에는 현재의 둔화기조가 계속되면서 작년과 비슷한 7.7%의 성장을 전망

- 경기회복세의 둔화와 반부패법 강화로 인해 2013년에도 소비보다는 기초 인프라 등의 투자가 경제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 정부의 목표치인 7.5% 이상은 달성할 전망
- 현재의 경기둔화를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정부는 불가피한 성장둔화를 어느 정도 감수할 것임.

■ 2013년은 새로운 지도부의 임기가 시작되는 해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경제구조 개혁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

- 중국정부는 지난 5월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서 안정적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억제, 리스크 방지 등을 강조하면서 중국경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경제성장 로드맵을 마련하고 제시함.
  ○ 9대 중점 개혁과제인 행정체계, 재정·세무, 금융, 투·융자, 가격체계, 민생, 도농균형, 농업, 과학기술을 확정하고 명확한 로드맵과 법률에 따라 향후 개혁을 추진할 전망
  ○ 예를 들면, 행정체계의 구체적인 개혁과제로는 투자 및 경영활동 자격심사 관련 항목의 취소 또는 권한 이양과 행정심사 항목의 신설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제시되고 있음.
- 경제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실시방안이 빠르게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경제 패러다임 전환도 신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지도부의 통치이념이나 경제정책 방향은 2013년 가을에 열리는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주석이 양회에서 강조된 중국몽(‘중국의 꿈’)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실현가능한 개념으로 통치이념이나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임.

나. 인도

1) 경제 동향

■ 2012년 인도 경제성장률은 5.1%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 2012년 4/4분기 성장률 역시 10년 만에 분기별 성장률 최저치인 4.5%로 저조했으며 2013년 1/4분기는 이보다 다소 높은 4.8%에 그침.
-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20년 만에 최저치인 1%로 저조함.

○ 2013년 4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2.3%로 특히 광업 부문의 생산 감소가 두드러짐(광업 -3%, 제조업 2.8%, 전력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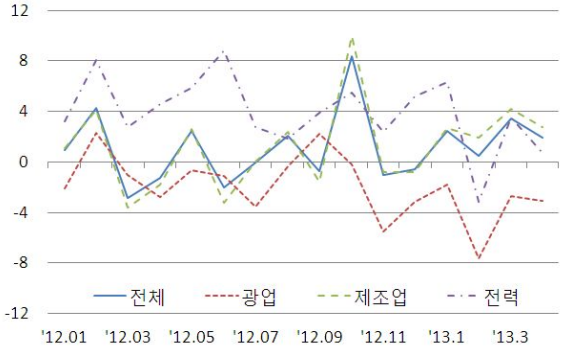
그림 29. 인도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주: 분기별 자료, 전년동기대비.
자료: 인도중앙은행.

그림 30.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산업별)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

■ 물가상승세는 최근 둔화되어 5월 도매물가 상승률은 3년 만에 최저치인 4.7%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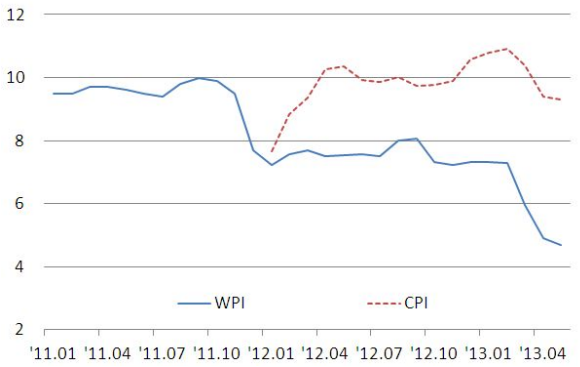
- 올해 초부터 제조 상품을 중심으로 도매물가 상승률은 완화되기 시작해 4월과 5월에는 인도 중앙은행이 정한 물가상승률 안정 수준인 5% 이하를 기록함(4월 4.9%, 5월 4.7%).
- 소비자물가 역시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3%를 기록함.

○ 그러나 식료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7%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최근 루피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사상 최저치(6월 11일 기준, 달러 대비 58.98루피)를 기록하는 등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향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그림 31. 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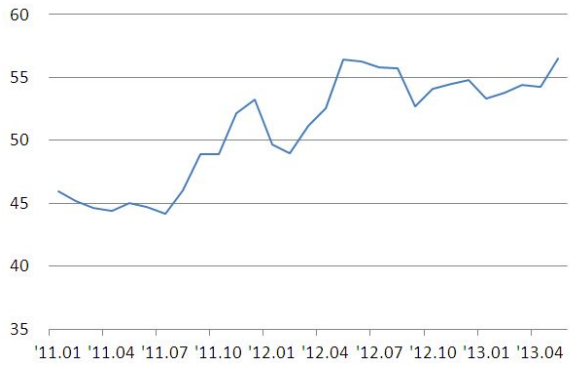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

그림 32. 달러 대비 루피 환율변동 추이

(단위: 루피/달러)



자료: CEIC.

■ 세계경제 둔화 여파로 수출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 수입 증가로 무역적자가 심화

- 2013년 1~5월 수출은 약 1,317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2.8% 증가했으나 수입은 4.5% 증가한 2,142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적자가 전년 동기의 7,606억 달러에서 8,243억 달러로 늘어남.

○ 최근 세계적인 금값 하락에 인도의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5월에는 월평균의 2배인 162톤이 수입되는 등 4월과 5월 사이 인도가 수입한 금의 양만 300톤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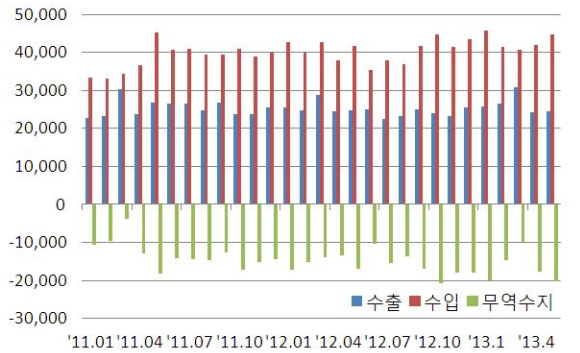
- 최근 루피화 가치 하락도 단기적으로 수출보다는 수입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됨.

○ 루피화 가치 하락으로 수출상품 가격경쟁력이 개선되면서 IT, 제약, 의류 등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다른 개발도상국가의 통화 가치도 같이 하락하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인 반면, 부품이나 연료 등의 수입 증가로 오히려 무역적자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33. 수출입과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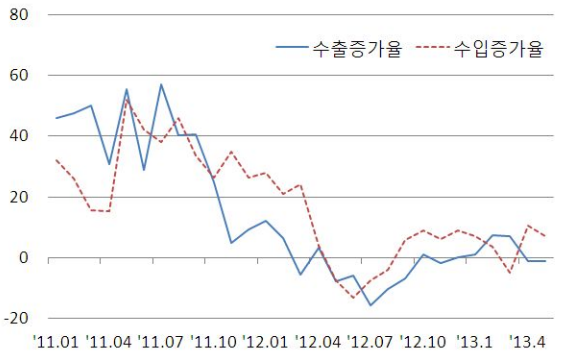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CEIC.

그림 34. 수출입 증가율 추이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CEIC.

2) 정책 현안 및 방향

■ 무역적자가 심화되자 인도 정부는 금 수입 제한정책을 발표

- 인도정부는 금 수입 제한을 위해 금 수입 관세를 1월 2%포인트 인상한 뒤 이어 6월에 다시 추가적으로 2%포인트 인상함.
- 인도정부는 관세 인상으로 6월부터 금 수입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로 실시하겠다고 밝힘.

■ 달러화 강세를 기대한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회수와 인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루피화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인도정부는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을 발표

- 그동안 환율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인도 중앙은행은 6월 들어 국영은행에 대규모 달러 매도를 주문하는 등 환율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함.
- 또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인도정부는 외국인의 국공채 투자와 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계획 중임.
  - ○ 6월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채권시장에서 대규모 회수에 나서자 인도 정부는 외국인 국공채 투자 금액 상한을 2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함.
  - ○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FDI 유입 속도가 감소하자 이를 확대시키기 위해 인도 정부는 일부 제한이 남아 있는 부문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 중임.

■ 투자 및 소비 확대를 위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논의는 지속

-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자 인도 중앙은행은 세 차례(1월, 3월, 5월)에 걸쳐 기준 금리를 인하해 현재 7.25%를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하지만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4.8%를 기록하면서 산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금리인하를 통한 투자와 소비 촉진의 필요성을 주장함.
- 그러나 6월 18일 인도 중앙은행은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함.

3) 2013년 경제전망

■ 2013년 인도경제는 하반기에 다소 회복되면서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5.4%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세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지 않고 있어 상반기까지 경제성장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하반기에 1~2차례 추가금리인하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다소 회복되면서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과 무역적자 폭 확대는 하반기 경기회복을 제한할 전망

-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라 연료 가격과 부품을 수입해 생산하는 전자 및 자동차 업체의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물가상승 압력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된다면 인도의 기준금리 인하정책은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인도의 각종 경제지표 변동성이 높아진 가운데 2014년 총선을 앞두고 정책 변동성 상승 가능성도 커진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

다. 러시아

1) 경제 동향

■ 2013년 상반기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약 1.7%에 이를 것으로 기록

- 지난 3월 키프로스 금융위기 발발 등 유럽 경제의 지속적인 부진은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러시아의 경제성장은 2012년 말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올 상반기에도 1.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1~6월 평균 우랄산 유가는 배럴당 106.5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평균 112.1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자원은 러시아의 수출품으로서 70% 이상을 차지하므로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유가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음.

○ 따라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석유가격의 하락세는 러시아 경제성장률의 둔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생산둔화와 소비침체가 이어지면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2012년보다 악화

- 고정자산투자는 최근 감소하고 있음. 상반기에 크게 감소세를 보였으나 5월에 성장세로 돌아섰음.

○ 러시아 투자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스프롬 등의 공기업 투자가 약 30% 감소한 것이 투자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산업생산(전년동기대비)은 연초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성장세로 돌아섰으나 상반기 0.1%의 미미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임.

표 27. 러시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구 분	2012년		2013년[1]	
	6월	1~6월	6월	1~6월
GDP 성장률	4.0	4.5	1.5	1.7
소비자물가상승률(전월대비, 전기말대비)	0.9	3.2	0.4	3.5
산업생산증가율	1.9	3.1	0.1	0.1
고정자산투자증가율	9.2	12.8	-3.7	-1.4
실질임금상승률[2]	10.2	10.7	6.0	5.5
소매거래량 증가율	7.7	7.7	3.5	3.7
수출(십억 달러)	40.8	262.5	41.6	252.5
수입(십억 달러)	27.0	154.1	28.0	160.9
우랄산 평균 유가(배럴당 달러)	93.4	112.1	102.9	106.5
환율(루블/US$, 평균)	32.92	30.64	32.28	31.01

주: 1) 전년동기대비.
2) 경제개발부 평가.
자료: 러시아 경제개발부(검색일: 2013. 7. 26).

- 2012년 소비 부문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였으나 2013년 초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다소 둔화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3월부터 자동차 판매(전년동기대비) 감소가 지속되는 등 내수악화
  - ○ 그러나 민간소비 부문은 점차 경기가 개선되면서 나아질 것으로 보임.

■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되고 있으나 흑자폭은 감소

- 유로존 재정위기로 인한 에너지 자원 수요의 감소, 수출 감소, 유가 하락 등은 러시아의 수출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
  - ○ 수입증가세, 수출감소세로 인해 흑자폭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3년 상반기에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63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억 달러가 줄어들었음.
  - ○ 한편 수입액 상승은 화학제품, 식료품, 자동차부품 등의 수입증가로 인한 것임.

■ 순자금유출현상도 계속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점차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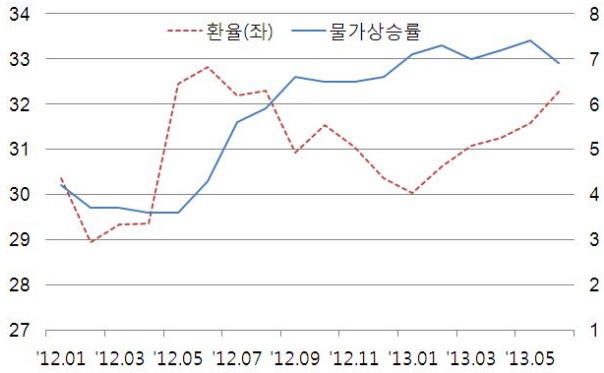
- 2012년 순자금유출액은 54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도 자금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러시아 중앙은행은 2013년 1분기 순자금유출액은 258억 달러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동기(336억 달러)에 비해 감소한 수준임.
- 한편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63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3.2% 상승하였는데, 주로 제조업, 도소매업에 집중되었으며,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었음.

■ 물가상승률은 7%대 기록, 루블은 지난 3월 평가 절하된 이후 같은 수준 유지

- 6월의 연간 물가상승률은 5월의 7.4%보다 다소 6.9%를 기록하였음.
  - ○ 물가상승은 과일 및 야채 가격과 교통비 증가로 인한 것이며, 4월에 있었던 화폐공급 증가도 한몫하였음.
- 중앙은행은 5~6%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9월 14일 인상한 재할인율을 8.25%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음.
- 러시아 루블의 가치는 2012년 5월 유로존 위기 재발 이후 2013년 3월 키프로스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소폭 하락하였음.

그림 35. 환율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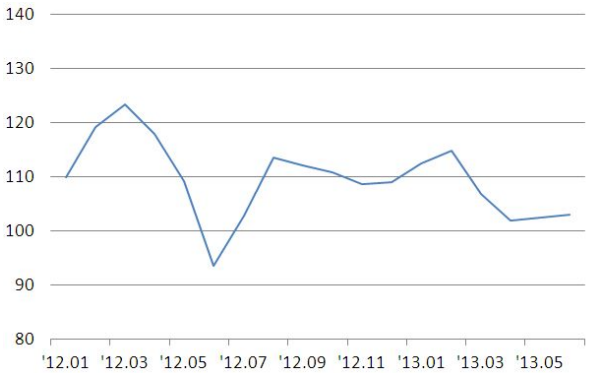
(단위: 루블/달러, %)



주: 2013년 7월 26일 기준.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그림 36. 우랄산 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주: 2013년 7월 26일 기준.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2) 정책 현안 및 방향

■ 2012년 8월 22일부터 WTO 정식회원국이 된 러시아는 지난 3월 18일 대외경제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외경제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채택

- 이 프로그램은 1) 국제협력을 통한 무역투자 활성화 2) 유라시아 경제연합 형성 3) 무역투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 4) 무역투자 규제 제도 마련 5) 세관제도 개선 등의 하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실행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총 4,200억 루블(약 140억 달러)의 예산이 책정될 것임.
- 이를 통해서 러시아 정부는 수출액의 1.5배(비에너지 품목의 경우 1.6배) 증가, 수출업체 수 2배 증가, 수출상품 다각화, 세계경제에서 러시아의 위치 제고 등을 달성하고자 함.

■ '2025년 극동·바이칼 경제 및 사회 발전계획'이 2013년 3월 29일에 국가두마에 의해 승인

- 푸틴 정부는 2012년 5월 극동개발부를 설치한 이후 같은 해 말 극동·바이칼 지역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였음.
- 새로운 계획은 광물·원자재 및 임업 단지 개발과 수산업, 농업, 교통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관광업 등의 개발, 거주민 주거환경 개선, 자연환경보호, 연구지원 등의 세부분야 개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이 계획의 이행을 위해 약 3.8조 루블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상당부분이 교통인프라에 집중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계획이 모두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민간기업의 자금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월 29일 '경제발전과 혁신경제'라는 국가 프로그램도 발효

- 이 프로그램은 2012년에 발표한 사회경제발전 우선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된 계획으로 판단됨.
- 투자환경 개선, 중소기업 발전, 부동산시장 활성화 조건 형성, 행정서비스 향상, 자연독점기업 및 규제 기관 효율성 제고, 혁신경제를 위한 인력 양성 등을 위한 하부 프로그램들로 구성됨.
- 2020년까지 약 8,600억 루블(약 287억 달러)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총 고용인원 중 중소기업 종사자의 비중 증가(2012년 26.3%에서 2020년 29.3%), Doing Business 순위 상승(2012년 120위에서 2018년 20위)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012년 6월 러시아의 민관협력(PPP)법 입법 예고가 발표된 이후 현재 법안이 국가두마에 계류 중

- 러시아 정부는 사회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방차원 민관협력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안을 계획하였음.
  - ○ 러시아와 같이 광범위한 영토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 및 기업들의 참여가 불가피하므로 이를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판단됨.
-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교통인프라, 공영시설, 전력공급시설, 유무선 통신 및 방송시설, 보건·의료시설, 교육·문화시설, 관광·레저·스포츠, 파이프라인 등 사회인프라임.
- 현재 국가두마에 계류 중이며 지난 4월 제1독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안은 제3독회까지 통과된 이후 발효될 수 있음.

3) 2013년 경제전망

■ 2013년 경제성장률은 약 2.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하반기에 세계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러시아도 상반기보다 높은 약 2.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산업생산증가율은 하반기에 보다 높아질 것이며, 내수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우랄산 석유가격은 현재 수준보다 약 1~5% 정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감소와 루블화 하락이 진행된다면 하반기 경기 개선 폭이 제한될 수 있음.
  - ○ 유로존 위기와 셰일가스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등장으로 우랄산 석유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수출 감소를 유발함.
  - ○ 이와 함께 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루블의 가치가 소폭 더 하락할 수 있음.
- 최근 러시아 경제성장의 부진은 주로 외부충격으로 인한 것으로 러시아 경제는 전반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 따라서 하반기에 유럽의 위기상황이 재발하는 등의 경우가 생기지 않는다면 러시아 경제 성장률은 상반기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13년 하반기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폭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

– 하반기에 계속해서 석유가격의 완만한 하락, 수출성장의 감소가 예상됨.

○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함께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 공급원이 확대됨에 따라 석유수요 및 가격 감소로 이어져 러시아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 따라서 2013년 수출총액은 약 5,000억 달러로 전년보다 5% 정도 감소할 것이며, 반대로 수입총액은 약 5% 증가한 3,5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정부는 올해 순자금유출액이 약 4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액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라. 브라질

1) 경제 동향

■ 완만한 회복세 진입

- 브라질 경제는 2012년 3/4분기(전년동기대비)부터 회복세로 돌아섰으나 그 성장 폭은 당초 예상보다 완만
- 2013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1.9%로 2011년 3/4분기 이후 최고치 기록
  - ○ 그러나 전기대비로는 2012년 4/4분기와 같은 0.6% 성장에 그침.
  - ○ 1/4분기 경제성장은 수요 측면에서 투자(전년동기대비 3.0% 증가) 및 가계소비(2.1%)가, 공급 측면에서는 농업(17.0%)이 주도

표 28. 브라질의 경제성장률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전기대비	0.8	0.5	-0.1	0.1	0.1	0.3	0.3	0.6	0.6
전년동기대비	4.2	3.3	2.1	1.4	0.8	0.5	0.9	1.4	1.9

자료: 브라질지리통계청(IBGE).

■ 가계소비 증가세 지속적 둔화

- 2013년 1/4분기까지 가계소비는 47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여 브라질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
- 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그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
  - ○ 가계소비 증가율: 2010년 6.9% → 2011년 4.1% → 2012년 3.1% → 2013년 1/4분기 2.1%

■ 산업생산 및 투자 성장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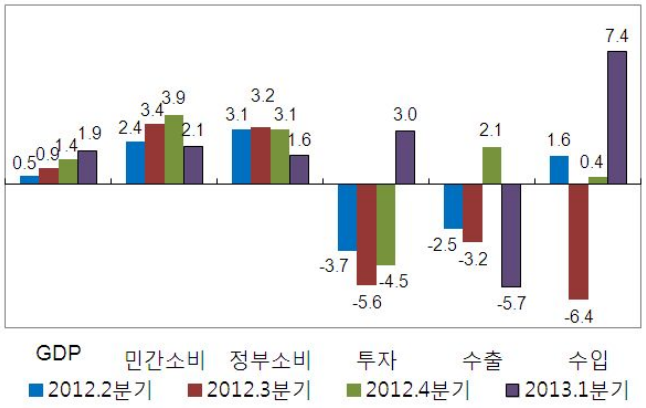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은 2012년 10월부터 간헐적인 성장세로 전환
- 2013년 1/4분기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4% 하락했으나 4월부터 성장세(전월대비 8.4%)로 전환
- 산업생산 증가에 힘입어 투자도 4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전년동기대비 3.0%) 기록

■ 수출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로 전환

- 올해 1~6월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7% 하락한 1,145억 달러 기록
  - ○ 국별 · 지역별로는 미국(-14.8%), EU(-7.4%), 중부유럽(-6.5%) 순으로, 품목별로는 항공기(-49.7%), 대두유(-48.7%), 원유(-48.5%), 연료유(-37.2%), 면화(-27.3%), 커피원두(-13.0%) 순으로 수출 하락세 현저
- 같은 기간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8.4% 증가한 1,175억 달러 기록한 결과 무역수지는 30억 달러 적자 기록

그림 37. 브라질의 경제성장률 추이(지출부문별)

(단위: %)



주: 전년동기대비
자료: IPEADATA.

■ 금융 · 외환시장 혼란 지속

- 6월 초부터 시작된 대중교통요금 인상 반대, 정치개혁을 주장하는 정치적 시위 확산 등 정치적 혼란으로 금융 · 외환시장 불안 지속

○ 주가(7. 11 현재): 6월 초 대비 13.6%, 연초 대비 25.5% 하락; 환율(7. 15 현재): 6월 초 대비 5.2%, 연초 대비 10.4% 상승; 국가위험도(EMBI+, 7. 12 현재): 6월 초 대비 27bps(234bps), 연초 대비 98bps 상승

■ 물가상승 압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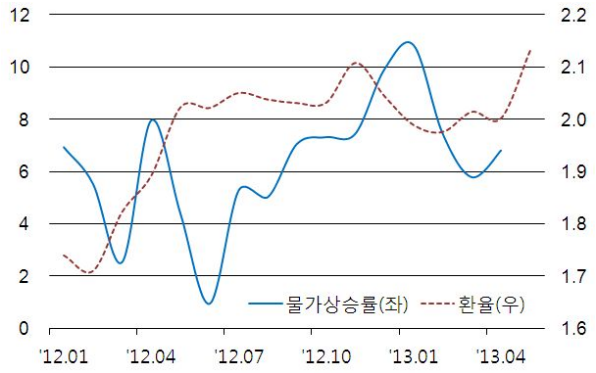
- 2013년 들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목표치(4±2.5%)를 상회하는 수준 기록

○ 금년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5%로 전월의 6.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4개월 연속 6%대 기록

- 노동비용 상승과 이에 따른 오락,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요금 상승, 식품 가격 인상, 헤알화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품 가격 인상,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등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

그림 38. 브라질의 물가 및 환율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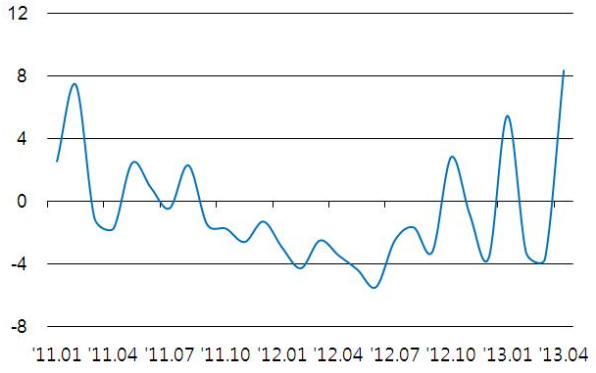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PEADATA.

그림 39. 브라질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단위: %)



자료: IPEADATA

2) 정책 현안 및 방향

■ 각종 물가상승억제책 실시

- 브라질 정부는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연초부터 전력요금 삭감, 일부 지역에서 교통요금 조정, 주요 식료품에 대한 세제 감축, 공업제품세(IPI) 감축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 실시
- 브라질 중앙은행은 또한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2013년 4월부터 연이어 금리를 인상

○ 그 결과 브라질의 정책금리(Selic)는 2013년 4월 7.25%에서 7월에는 8.5%로 1.25%포인트 인상

■ 금융거래세(IOF) 전면 폐지

- 브라질 정부는 지속적인 헤알화 약세 억제를 위해 해외투자자들의 국내 채권 투자 시 부과하는 금융거래세(IOF)를 종전 6%에서 0%로 전면 폐지
- 이번 금융거래세 폐지로 브라질 정부는 헤알화 강세 전환 → 수입물가 하락 → 물가상승 압력 완화의 효과를 기대

3) 2013년 경제전망

■ 외수보다는 내수가 경제성장 견인

- 2013년 브라질 경제는 투자 및 소비 등 내수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성장률을 상회하는 2%대 성장을 달성할 전망
- 연방 및 지방정부의 공공 투자 확대, 2014년 월드컵 관련 투자, 정부의 각종 투자 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투자가 성장을 주도할 전망
- 투자 증가세에 힘입어 산업생산도 플러스 성장세를 지속, 하반기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
- 가계 소비도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진작책의 효과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추동할 전망이나 그 성장 폭은 미약할 전망

■ 그러나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 가계부채 및 부채 상환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세 둔화로 하반기에도 빠른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국내 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달러 기준 노동비용은 2002년 말 이후 300%가 상승해 브라질 수출 경쟁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
- 지난 10년간 급격한 신용대출 확대는 가계 부채 및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제한

○ 특히 문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2008년부터 브라질 정부가 실시한 소비촉진정책의 결과,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한데다 경제성장 둔화의 여파로 개인의 부실여신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

○ 연간 가계소득대비 부채 상환 비중은 2008년 31%에서 2013년 3월 44%로 증가

- 이 같은 높은 가계부채 비중과 부실여신 증가로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소비촉진책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소비주도 성장모델이 한계점에 봉착했다는 평가

■ 특히 최근 정치적 시위 확산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 가중 → 투자환경 및 재정 상황 악화 → 대외신인도 하락 → 국가신용등급 강등 등의 시나리오가 연출될 경우 브라질 경제의 빠른 회복은 더욱 지체될 전망

- 지난 6월 6일 S&P는 경제성장 둔화와 팽창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브라질의 신용등급(BBB)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무디스와 피치도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

■ 정부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압박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

- 최근 브라질의 물가상승이 노동비용 상승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어 금리인상 등 정부의 억제책에도 그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
- 브라질 중앙은행이 물가상승 압력 완화를 위해 하반기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 정책금리는 현재 8.5%에서 금년 말에는 9%선으로 인상될 전망

■ 브라질 경제의 펀더멘털이 비교적 튼실하기 때문에, 정치적 혼란이 경제위기로 비화되어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은 아직까지 희박

- 다만 경제성장 둔화와 팽창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무역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는 브라질 경제의 지속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할 전망

3. 기타 신흥지역 경제

가. 동남아시아

1) 주요국 경제 동향

■ 2013년 1/4분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남아 주요국들은 주요기관의 전망치보다 다소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

- 인도네시아 경제는 국제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액 감소로 전년동기대비 6.0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말레이시아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4.1%로서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더디게 나타남에 따라 수출이 줄어들었으며, 고정투자증가율도 하락하였음.
- 지난 1/4분기 태국은 바트화 강세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전년동기대비 5.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반면 필리핀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7.8%로서 동남아 주요국 중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성장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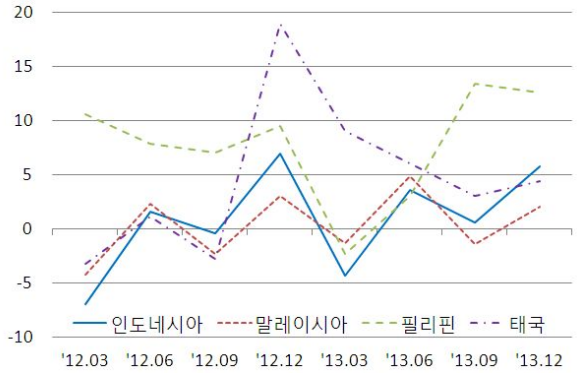
- GDP 대비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건설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이 증가함.
- 필리핀 통계청은 1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며 제조업의 성장, 건설 및 산업장비에 대한 투자 증가, 해외송금의 지속적 유입 등을 고성장의 배경으로 분석하였음.

■ 2013년 상반기 동남아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은 2012년 4/4분기에 비해 다소 하락했으며, 고정투자 증가율도 하락(그림 40, 41 참조)

- 미국, 일본의 양적완화와 단기자금 유입으로 인해 동남아 주요국의 통화가 강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해외수요가 더디게 회복됨에 따라 1/4분기 수출증가율이 하락함.
- 말레이시아는 전년대비 정부주도형 투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라 광업부문의 투자가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로 인해 공공투자 또한 감소세를 보임.

그림 40. 동남아 주요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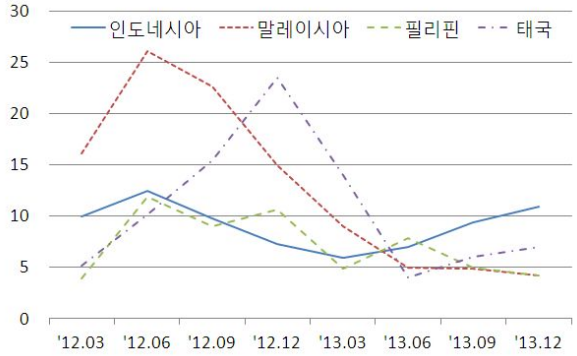
(단위: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인도네시아는 2013년 2/4분기, 그 외 국가들은 2013년 1/4분기 이후 추정치 및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13년 5월).

그림 41. 동남아 주요국의 고정투자 증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인도네시아는 2013년 2/4분기, 그 외 국가들은 2013년 1/4분기 이후 추정치 및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13년 5월); Oxford Economics(2013년 6월).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료보조금 삭감을 통한 재정적자 감소와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외국인자본 유입 및 환율안정화에 집중

- 지난 6월 17일 연료보조금 삭감을 통하여 현재 리터당 4,500루피아(약 500원)인 휘발유 가격을 44% 인상하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

○ 연료보조금 문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여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왔으며, 수년간 각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보조금 삭감 법안이 무산되어 왔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고, 연료 수입 감소로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고자 함.

- 또한 주변 신흥국과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최근 광물수출세 도입과 무역수지 적자에 따른 외자유출로 루피아 가치가 급락했으며, 이에 지난 6월 13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환율안정화를 유도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2013년 5월 실시된 총선에서 현 집권당이 승리함으로써 기존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 나집 라작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에 대한 현금지원, 철도·도로 등 교통기반시설 건설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기존의 내수촉진을 위한 정책기조를 이어가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는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자금투입으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 있음.

■ 필리핀의 경우 2013년 5월 아키노 진영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이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이 가속화될 전망

- 이번 총선은 아키노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압도적 승리에 따라 향후에도 정부지출을 늘려 내수 진작을 도모하고 PPP 방식의 인프라 관련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

■ 태국 정부는 바트화 강세 및 경제성장 둔화우려에 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 지난 5월 29일 베트남은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와 전망치보다 낮은 1/4분기 경제성장률의 영향으로 인해 기준 금리를 2.75%에서 2.50% 하향 조정하였음.
- 태국 정부는 사상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인 물 관련 프로젝트 및 방콕과 주요 도시간 고속철도건설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3) 2013년 전망

■ 2013년 동남아 주요국은 지난해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연간 5.5%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표 29 참고).

- 대외경기의 더딘 회복세에 따른 수출 부진 및 고정투자 증가율 하락으로 인해 상반기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하락할 것이나,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일 전망임.
- 이는 각국의 GDP 대비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부문에서 증가율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임(그림 42 참고).

■ 2013년 인도네시아의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5.9%,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0.1%포인트 하락한 6.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2013년 상반기 환율 하락 및 연료 보조금 삭감 법안 추진으로 물가인상이 예상되어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연료보조금 삭감 법안 통과 이후, 신용 회복에 따른 투자 회복과 2014년 대선 및 총선을 앞둔 현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보다 상승할 것임.

표 29. 2013년 동남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국가명	2012년 연간	2013년 연간	2013년 상반기	2013년 하반기
인도네시아	6.2	6.1	5.9	6.2
말레이시아	5.6	4.4	4.2	4.6
필리핀	6.6	6.6	6.8	6.4
태국	6.4	4.8	5.3	4.3
ASEAN 4	6.3	5.5	5.6	5.5

그림 42. 동남아 주요국의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및 전망

(단위: %)

주: 1) 전년동기대비
2) 인도네시아는 2013년 2/4분기, 그 외 국가들은 2013년 1/4분기 이후 추정치임.
자료: Global Insight(2013년 5월).

■ 말레이시아 경제는 전년대비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어 상반기 4.2%, 하반기 4.6%로 연간 4.4% 성장할 전망

- 2012년 말레이시아 정부가 다수의 대형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착수하며 고정투자가 크게 증가한 바 있으나, 2013년에는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의 수가 감소하여 고정투자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은 상반기 6.8%, 하반기 6.4%로 2013년 동남아 주요국 중 최고치인 연간 6.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지난 5월,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필리핀의 신용등급을 BBB-인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조정했으며 경제 전반에서 고성장세를 나타냄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고정투자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분기별 민간소비부문에서도 평균 6%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경제성장의 주요배경으로 작용할 것임.

■ 2012년 6.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태국 경제는 대홍수 기저효과 감소 및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인해 2013년 상반기 5.3%, 하반기 4.3%로 연간 4.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바트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에 비해서 통화정책 대응이 다소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준금리 인하 효과는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임.
- 내수 경기부양을 위한 국책사업 추진 등의 정책 효과는 4/4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나. 중남미

1) 주요국 경제 동향

■ (경제성장) 2013년 상반기 중남미지역 경제는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을 비롯한 2012년 저성장 국가들의 회복세와 페루, 칠레, 파나마 등 고성장국의 상대적인 성장률 둔화세가 혼재

– 브라질의 성장률 회복은 2012년 이상기후로 부진했던 농업생산의 정상화 및 팽창적인 재정정책(인프라 투자)에, 멕시코와 안데스 주요국 성장률 둔화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 감소 및 국제상품가격 하락에 기인함.

○ 그러나 브라질의 경우에도 콜롬비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과 동일하게 공업생산증가율은 마이너스 혹은 둔화되었음.

– 이러한 가운데 5월말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정책 모색과 일본의 아베노믹스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금융 및 외환시장의 불안정성과 프리미엄리스크 상승은 중남미지역 경제활동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브라질 경제전망에 대한 S&P의 부정적 평가(국가신용등급 BB, 안정적→부정적 조정, 6월 6일), 주요국 증권시장 수익률 급락 등은 하반기 중남미지역 경제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반영함.

표 30. 중남미 주요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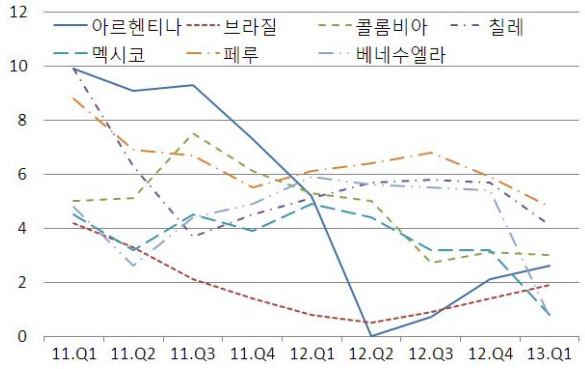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분기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중남미
2011년 1/4	4.2	4.5	5.0	9.9	8.8	9.9	5.5
2/4	3.3	3.2	5.1	9.1	6.9	6.3	4.2
3/4	2.1	4.5	7.5	9.3	6.7	3.7	4.2
4/4	1.4	3.9	6.1	7.3	5.5	4.5	3.6
2011년	**2.7**	**3.8**	**6.6**	**8.9**	**6.9**	**5.9**	**4.3**
2012년 1/4	0.8	4.9	5.3	5.2	6.1	5.1	3.6
2/4	0.5	4.4	5.0	0.0	6.4	5.7	2.4
3/4	0.9	3.2	2.7	0.7	6.8	5.8	–
4/4	1.4	3.2	3.1	2.1	5.9	5.7	–
2012년	**0.9**	**3.9**	**4.0**	**1.9**	**6.3**	**5.5**	**3.0**
2013년 1/4	1.9	0.8	3.0	2.6	4.8	4.1	–
2013년	**2.5**	**2.8**	**4.0**	**3.5**	**5.9**	**4.6**	**3.0**

자료: 각국 중앙은행 및 통계청; ECLAC,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13, Julio 2013.

그림 43. 주요국 GDP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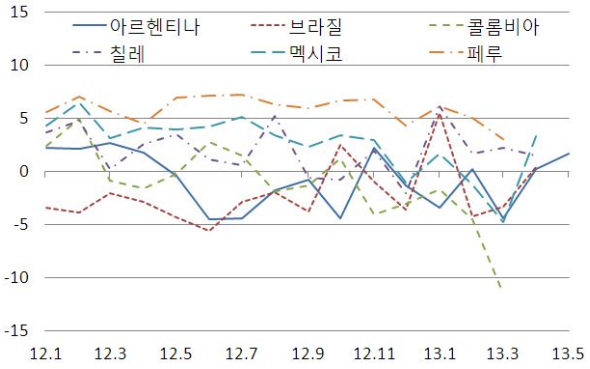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대비, %)



자료: ECLAC.

그림 44. 주요국 공업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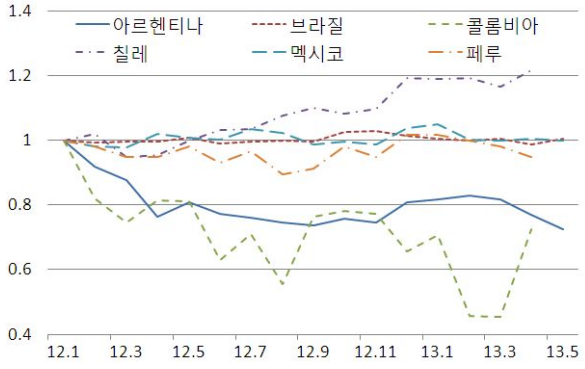
자료: Trading Economics.

■ 소비자신뢰지수 및 기업신뢰지수는 안정 추세

– 중남미지역 경제에 우호적인 대외환경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주요국 내수 선행지표들의 안정적인 유지 현상은 중남미지역 경제가 내수에 의해 견인되고 있음을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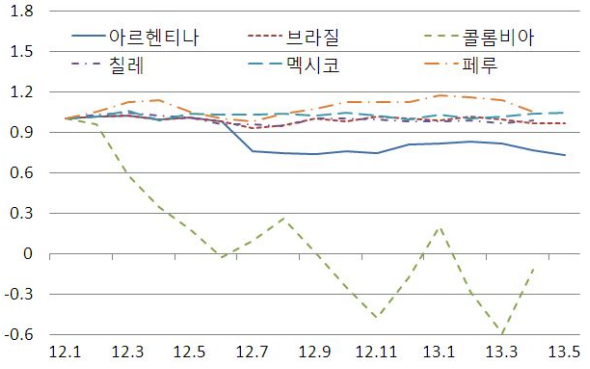
○ 아르헨티나 소비자신뢰지수의 기준점(threshold) 하회와 콜롬비아 기업신뢰지수의 급등락이 주목됨.

그림 45. 주요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주: 2012년 1월=1 기준.
자료: Trading Economics.

그림 46. 주요국 기업신뢰지수 추이



주: 2012년 1월=1 기준.
자료: Trading Econom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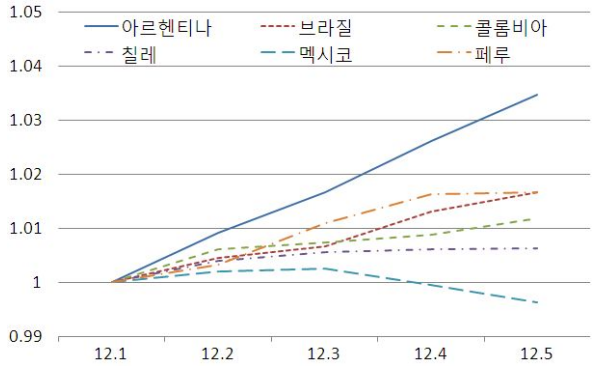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안정세 유지

– 가격 및 외환통제를 실시중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기저효과에 따른 경기 급반등 효과를 보이고 있는 파라과이, 그리고 물가목표제를 도입하지 않은 우루과이를 제외한 중남미 주요국의 소비자물가는 각국 중앙은행 목표치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전반적인 경제성장 둔화, 수출상품가격 약세(콜롬비아, 칠레, 페루), 유가하락에 따른 전력요금 인하(칠레), 식량수입가격 하락(칠레, 페루, 콜롬비아), 조세인하(칠레, 콜롬비아), 환율하락(멕시코)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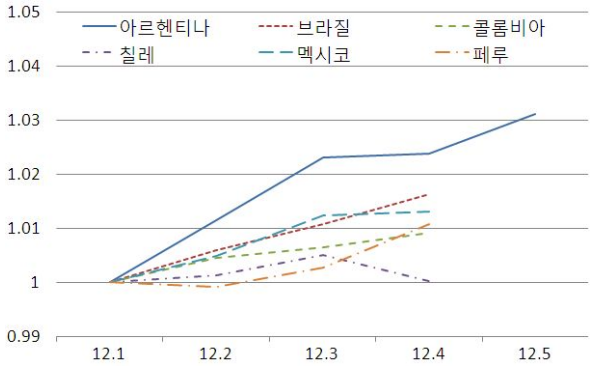
– 비록 브라질처럼 전력요금 인하, 식량 등 소비재 세율 인하, 공공요금 조정 연기 등에도 불구하고 팽창 재정정책, 노동시장 경직성, 수입관세 인상, 환율상승 등을 원인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제고되는 사례도 있지만, 주요국의 소비자물가는 중앙은행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형성될 전망임.

그림 47.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주: 2012년 1월=1, 월말기준
자료: Trading Economics.

그림 48. 주요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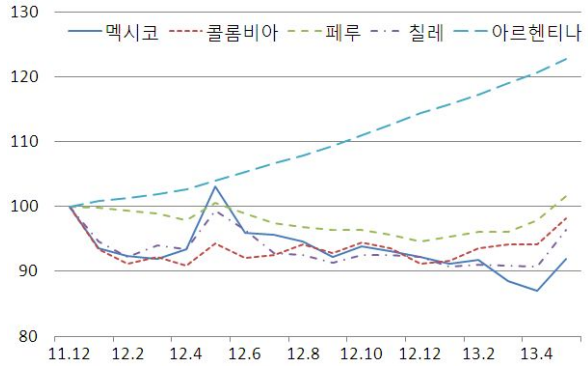


주: 2013년 1월=1, 월말 기준
자료: Trading Economics.

■ 주요국 환율은 5월 말 이후 상승세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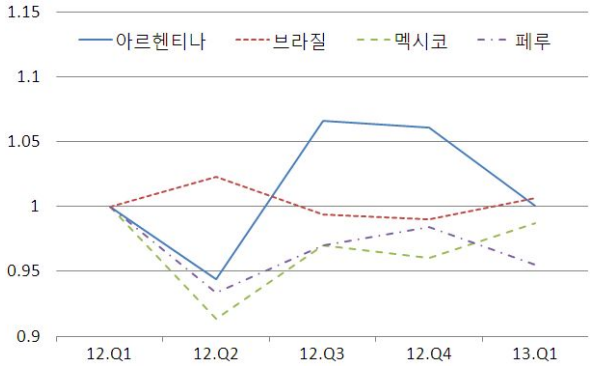
-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면서 5월 중순까지 중남미 주요국 환율은 하락세를 기록
  - ○ 멕시코, 칠레, 브라질의 경우 대표적인 환율하락 국가임.
  - ○ 반면,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의 경우 투자환경 악화, 광업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유지
- 그러나 환율하락세는 5월 말 이후 급격한 상승세로 전환된 바, 유로존 경기 악화, 글로벌 및 중남미지역 경기침체 가속화 등의 신규 악재가 돌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상임을 감안하면 미국 양적완화정책 수정 전망과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패에 대한 불안감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 또한 국제상품가격 하락으로 중남미지역으로의 외환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환율상승에 일조하고 있는바, 현저한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하반기 지속적인 환율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임.

그림 49. 주요국 환율 추이



주: 2011년 12월=100, 월말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50. 주요국 교역조건 추이



주: 2012년 1분기=1, 분기말 기준
자료: Trading Economics.

■ 경상수지 적자 확대 전망

- 2012년 대비 경제성장 확대, 수출상품 가격하락 및 수출감소, 제조업 경쟁력 하락, 역내교역(MERCOSUR) 침체,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됨.
- 특히 내수 중심의 성장이 지속되고 하반기 외국인투자 감소 및 단기 자본 유출에 따른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경상수지는 하반기에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 재정수지는 안정적이고 관리 가능한 수준 유지

- 2012년 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한 칠레와 페루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관리 가능한 수준(GDP 대비 3%) 이내에서 적자를 기록함.
  - ○ 이러한 재정수지는 국제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지만 재정수입 증가에 기여하는 내수활성화에 따른 것인바, 특히 재정수지 악화를 동반하지 않은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기초가 됨.
- 칠레(상품수출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 전환), 콜롬비아(내수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로 적자 확대), 페루(경기부양 실시에 따른 흑자 감소)를 제외한 주요국의 재정수지 적자는 2012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임.

■ (경기전망) 2013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혼조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되는 가운데 연초 전망치(3.6%)보다 낮은 2012년 수준에 그칠 전망

- IMF(2012년 10월, 3.9%→2013년 1월, 3.6%→2013년 5월, 3.5%→2013년 7월, 3.0%)[9]와 UN(2013년 1월, 3.9%→2013년 4월, 3.6%)[10]의 경우처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바, 하반기 전망발표치도 지속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2) 정책 현안 및 방향

■ (통화정책) 주요국별 통화정책 방향 상이

-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및 중남미지역 성장률 둔화 추세를 감안하면 통화정책 방향이 경기부양으로 맞추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반기 동향은 주요국 경제사정에 따라 금리인하, 인상, 그리고 '관망세(wait-and-see)'로 나타남.
  - ○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물가하락세 및 상승 압력 저하,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글로벌 유동성 증가에 따른 환율 하락 전망 등을 근거로 금리를 인하함.
  - ○ 반면, 브라질(5월 29일)은 내수팽창에 따른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금리를 인상함.
  - ○ 한편 멕시코, 콜롬비아와 유사한 환경에 처해 있는 칠레, 페루 등 물가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글로벌 위험이 내수에 미칠 영향과 목표 상한선 이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물가수준을 감안하여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함.
- 주요국별 하반기 통화정책 방향은 상반기와 유사하나, 글로벌 및 내수 경기 회복 여부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 ○ 인프라 투자확대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브라질의 통화정책 방향은 긴축으로 유지될 전망

9) IMF(2013), Regional Economic Outlook: Western Hemisphere, Time to Rebuild Policy Space; IMF(2012), World Economic Outlook: Coping with High Debt and Sluggish Growth, October; IMF. 2013.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radual Upturn in Global Growth During 2013, January; IMF. 2013.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Growing Pains, July.

10) UN(2013),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3; UN(2013),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3 Updated as of mid-2013.

■ (주요 위험) 미국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 가능성 및 일본의 양적완화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이중적인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금융 및 외환시장 변동성 증대

-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의 급격한 유출입은 자산 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을 높이고, 주요국 통화 및 외환정책 방향 결정에 혼선을 야기하거나 각국 정책당국의 경기대응정책 시행 여력을 제한할 수 있음.

3) 2013년 경제전망

■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2013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

- 상반기 경기둔화와 하반기 경제대국인 브라질 및 멕시코 성장 둔화 전망 및 주요 고성장국이던 칠레, 파나마, 페루 성장률 하향 조정 등으로 연초 전망치(4%)를 하회하는 2012년 수준(3.5%)에 그칠 전망

○ 기저효과와 인프라 투자증가 영향을 받고 있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성장 회복이 주목되지만 미국경기에 민감한 멕시코를 비롯한 중미 국가들과 중국 등 자원수입국 경기에 민감한 안데스 국가들의 성장률은 둔화 전망

○ 그러나 이러한 성장률 달성 전망은 최근 브라질 사례(국채가격 하락, 주식시장 침체 등 금융시장 불안정성 상승, 국가신용등급 하락)처럼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이 하반기 중남미지역에서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함.

-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에 버금가는 정부 주도 및 개입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가 더욱 위축되면서 고성장세 회복은 어려울 전망

○ 폐소화 지지 및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외환 및 무역 통제, 건설 및 부동산부문에 대한 달러 투입 제한 등 국가 개입 및 변동성이 높은 경제정책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작용

-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다른 중남미 국가들보다 탄탄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미국의 경제성장 둔화로 동반 둔화가 불가피함.

○ 그러나 상반기 노동, 교육, 방송통신부문 개혁에 이어 하반기 금융, 에너지부문 개혁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경우 투자심리 회복 등으로 경제성장에 기여 전망

- (콜롬비아) 4월 발표된 경기부양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4.0%로 둔화될 전망인데, 물가목표 상한선(4%)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낮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추가적인 경기부양 목적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어 연말 성장률 전망은 다소 유동적임.

- (페루) 2009년 이래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1/4분기 4.8%)을 기록하자 정부는 민간투자촉진조치(투자허가기간 명시 등 행정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제출 절차 간소화, 자본시장 활성화)로 고성장을 지속하려 하지만, 주요 산업인 광업이 활성화될 환경(글로벌 경기회복과 수출상품가격 상승, 자원개발원주민사전협의법)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함.

- (칠레) 구리가격 약세,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광업 및 에너지부문 투자 감소가 성장 둔화의 주된 요인인바, 글로벌 경기회복, 특히 중국 등 주요 구리 수입국의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5% 성장조차 기대하기 어려움.

○ 이 경우 통화정책도 관망세에서 선회하여 2012년 1월 이후 5%로 유지되고 있는 정책금리를 하반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음.

다. 중동

1) 주요국 경제 동향

■ 2013년 상반기 중동경제는 유가 하락, 원유 수요 감소, 역내 안보 불안 증가로 인해 전년보다 저조한 3%대 초반의 성장 예상

- 원유수출국의 경우 원유 수요 감소 및 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정 수입이 감소하였으나 정부지출은 2012년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3%대 초반의 경제성장이 예상됨.
- 원유수입국의 경우 정부지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대비 실질 GDP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미국, EU 등 주요 교역국의 저조한 경기회복으로 인해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추세임.
- 특히 역내 정정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을 제외한 다른 중동 국가들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난항을 겪고 있음.

○ 리비아, 이집트, 모로코, 예멘 등 정권교체 4개국은 여전히 정치·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리아 분쟁이 2년 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등 인접국으로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2013년 경제성장률은 유가 하락 및 원유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소폭 하락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2년 원유 증산 및 고유가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6.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으나 2013년 들어 유가가 소폭 하락하고 세계경제는 느리게 회복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2012년 원유 생산량은 일일 974만 배럴, 두바이유 평균 유가는 109달러였으나, 2013년 1/4분기 원유 생산량 일일 911만 배럴,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하면서 실질 GDP 규모 및 재정 수입이 감소함.[11)]

- UAE도 2013년에 원유 수입(收入) 감소로 석유부문의 성장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관광 및 물류 산업 등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4%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 2013년 들어 두바이를 중심으로 중단되었던 건설 프로젝트 및 신규 대형 프로젝트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역내에서 비교적 사업 환경이 안정적인 UAE로의 기업 진출이 증가하면서 비석유부문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음.

■ 리비아와 이라크 모두 재건 및 개발 사업에 막대한 정부재정을 투자하고 있어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

- 리비아는 주요 국제석유기업의 신규 개발 및 생산 재개에 힘입어 원유 생산량이 내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정부의 재정확대정책에 따라 20% 수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함.

○ 2013년 상반기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축소되었으나 일일 140만 배럴 수준의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비석유부문 또한 전년대비 약 24%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1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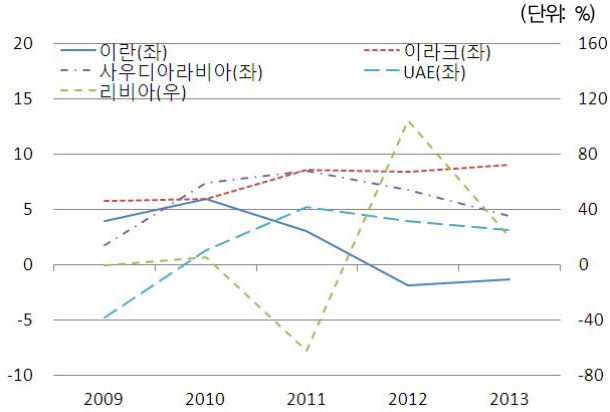
11) OPEC(2013년 6월), OPEC monthly Oil Market Report; 페트로넷. 국제석유정보. http://www.petronet.co.kr/main2.jsp (검색일: 2013년 6월 15일).

- 이라크는 증가하고 있는 원유 생산량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인해 2013년에도 8%대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 2013년 4월 기준 이라크의 원유 생산량은 일일 315만 배럴로 생산량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일일 3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특히 쿠르드 자치정부의 외국계 기업의 등록 수가 4월 기준 2,300개를 넘어서는 등 치안이 안정적이고 투자환경이 좋은 쿠르드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음.[13]

■ 이란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여파로 인한 경제난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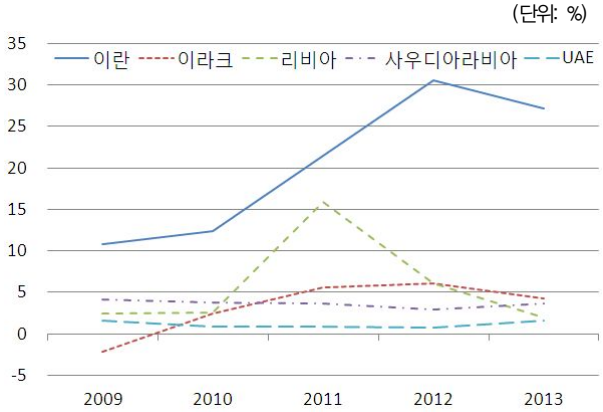
- 2013년 상반기에도 이란산 원유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경제성장률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재정수지도 -3%대 중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 미국의 「2012년 국방수권법」으로 인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여 2013년 1/4분기 이란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9.3% 감소한 268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일일 수출량도 100만 배럴로 감소함.[14]
- 대이란 경제제재의 여파로 인해 2013년 4월 기준 리알화 가치는 전년동기대비 59.4% 폭락한 달러당 30,615리알을 기록하였고 소비자물가상승률도 37.8%까지 급등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15]

그림 51. 중동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주: 전년대비, 실질 GDP 기준.
자료: IMF(2013), Regional Economic Outlook Update May 2013, p. 10.

그림 52. 중동 주요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 전년대비.
자료: IMF(2013), Regional Economic Outlook Update May 2013, p. 10.

12) OPEC(2013), Monthly Oil Market Report June 2013. p. 42; IMF. 2013. "IMF Executive Board Concludes the 2013 Article IV Consultation with Libya." (May 23)
13) Shafaq News(2013), "2300 Foreign Firm in Kurdistan." (April 13)
14) EIU(2013), Iran Country Report May 2013; Oxford Economics. 2013. Iran Country Economic Forecast: 10 June 2013.
15) Global Insight(2013), Iran Monthly Forecast May 2013.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내 안정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을 지속하고 있으며 UAE는 비석유부문 개발을 위한 각종 정책 추진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에도 2,187억 달러의 막대한 정부지출을 계획하였으며, 이 중 교육 및 인력 양성(544억 달러), 보건 및 사회복지(267억 달러)에 전체 예산의 37.1%를 할애하여 실업률 감소 및 민생안정을 위해 사용하고자 함.[16]
-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니타카트(Nitaqat) 제도[17]를 25만여 개의 중소기업에도 확대 적용하여 자국민 의무고용을 늘리고자 함.[18]
- UAE는 문화 및 관광, 항공, 제조, 보건의료, 석유화학 등 비석유부문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여 자국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민간부문에서의 자국민 고용을 증가시키고자 함.

○ 아부다비는 2차 5개년 계획(2013~17)에서 8대 중점 산업을 선정하여 더욱 강력한 산업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두바이는 교통 및 항공, 관광 및 산업도시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재개하거나 신규 발주하여 석유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리비아와 이라크 모두 경제성장의 동력인 원유 증산을 위한 투자에 주안점을 두고 경제정책 추진

- 리비아는 정부 주도로 인프라 확충 및 재건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3년 연내에 석유법을 개정하여 국제석유기업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리비아 정부는 재건 및 개발 부문에 2013년 전체 예산의 28%인 193억 디나르(154억 달러)를 편성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석유화학 등의 산업 육성과 전력·주택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됨.[19]

- 이라크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출을 통한 본격적인 국가재건 및 사회 인프라 건설에 투자할 예정이며 특히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유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함.

○ 2013년 3월 최종 발표된 이라크 예산은 전년대비 18% 증가한 1,107억 달러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 및 가스 개발, 생산 시설, 운송, 저장 및 수출 등과 같은 에너지 부문으로 총 예산의 21%에 해당함.[20]

■ 이란은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저항 경제(Economy of Resistance)' 정책 추진

- 이란은 원유부문에 부과된 제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비석유부문의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함.

---

16) Altukri, Fahad(2012), "Saudi Arabia's 2013 budget," Jawda Investment.
17) 니타카트(Nitaqat)란 '범위', '지역' 이란 의미의 아랍어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우선고용정책의 일환임. 산업별로 자국민 의무고용비율을 부여하여 이에 대한 준수여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로 인센티브 혹은 제재를 가하는 제도임.
18) Ghafour, P. K. Abdul(2013), "Nitaqat cleanup: 2 million face ax," Arab news. (March 24)
19) Zaptia, Sami and Ashraf Abdel-Wahab(2013), The 2013 Budget: A breakdown of the main sectors. Libya Herald. (March 22).
20) 장다연(2013), 「2013년도 이라크 투자 예산 점차 확대」. 코트라 글로벌윈도우 해외시장정보 (5월 14일).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02836&ARTICLE_SE=20301 (검색일: 2013년 5월 19일)

○ 이란은 경제제재의 여파로 원유 수출량이 약 20% 감소하였으나 휘발유 및 기타 제품의 수출을 확대하여 원유 수출 감소에 따른 피해를 상쇄하였다고 주장함.[21)]

– 이란 정부는 상품 수입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과다 지급되는 보조금을 축소하여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함.

○ 이란은 원유 생산량에 비해 정유 능력이 부족하여 휘발유의 수입 의존도가 높았으나 제재 이후 정유 능력을 제고하여 최근 휘발유 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고 밝힘.[22)]

3) 2013년 경제전망

■ 2013년 하반기 중동경제는 유가 추가 하락,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으로 인해 원유 수출국 · 수입국의 경제성장률 동반 하락 우려

– 최근 미국 · EU 등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리아 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력 개입 가능성도 증가하여 하반기 역내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원유수출국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비전통 에너지의 공급 증가로 인해 유가 상승 압력이 상쇄될 여지가 있으며 정부지출의 증가폭이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은 2%대 후반으로 둔화될 전망임.

– 원유수입국의 경우 수출 및 관광수입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상반기 대비 재정지출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 2%대 중반의 제한적인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나 유가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3년에 재정확대정책과 각종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어갈 것이나 하반기에도 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정부재정수지 악화 및 수출 감소로 성장 둔화가 예상됨.

– UAE는 두바이의 건설경기 회복 및 관광, 물류, 보건의료, 알루미늄 산업 등 비석유부문의 성장세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이나 아부다비 부동산 경기의 미약한 회복과 함께 두바이 채무상환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지출을 축소할 경우 하반기의 경제성장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두바이의 총 채무는 1,420억 달러이며 이 중 2012년 146억 달러, 2013년 100억 달러로 부채상환 규모가 작았으나 2014년에 도래하는 부채상환액은 300억 달러로 비교적 커 두바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리비아와 이라크는 석유 생산 증가와 재건 수요 확대로 하반기에도 고성장이 예상되나 역내 정정 불안으로 인한 위험요인이 상존

– 2013년 하반기에도 리비아는 원유 수출을 기반으로 20% 수준의 높은 경제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나 현재의 정치 · 사회 · 안보 불안이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국제석유기업의 사업 재개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리비아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전년대비 10.3% 증가한 152만 배럴을 기록할 전망이나 당초 예상치인 180만

21) Al Arabiya(2013), "Iran says sanctions not affecting oil production." (May 31)
22) 페트로넷 뉴스(2013), 「일본 이란산 원유 수입, 역대 최저치 기록」. (6월 3일)

배럴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임.[23)]

○ 특히 헌법 제정 지연, 무장 민병대의 세력 확대, 지역·부족·종교 간 분열, 테러위협 지속 등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안보 불안문제가 선결되어야 함.

– 이라크 정부의 막대한 투자계획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도 높은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올해 이라크 정부의 최종예산에 대한 의결이 3월에서야 이루어져 상반기에 실행되지 못했던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집행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24)]

– 최근 들어 순니와 시아의 종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원유 통제권을 두고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간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러한 국내 정정불안 지속이 하반기 경제성장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임.[25)]

■ 이란은 경제난 심화 우려와 대외관계 개선에 따른 경기회복 기대 공존

– 국제사회가 대이란 제재의 범위를 자동차산업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란은 비원유부문의 생산 증대를 통해 원유 수출감소를 상쇄하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은 7월 1일 발효된 「2013년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 13645」를 통해 귀금속, 철강 등 특정 물자(certain materials)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대이란 판매, 공급, 이전 등을 제한하고 있음.[26)]

– 한편 중도 성향의 신정부가 국제사회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입장 차를 축소하고 우라늄 농축 문제를 적정 수준에서 타협할 경우 대이란 제재의 수위가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음.

○ 제11대 이란 대통령으로 당선된 핫산 로우하니(Hassan Rouhani)는 핵 협상 대표 시절(2003~05년) 우라늄 농축 중단에 합의하기도 한 중도파 인물로 아흐마디네자드(Ahmadinejad) 정부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경제회복을 위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여지가 있음.

표 31. 주요 기관별 중동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IMF			Global Insight		EIU	
	2012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MENA	4.7	3.1	3.7	2.9	3.8	3.2	4.1
사우디아라비아	6.8	4.4	4.2	4.2	4.7	4.0	5.1
UAE	3.9	3.1	3.6	3.3	3.8	4.1	4.4
리비아	104.5	20.2	10.1	6.8	4.9	11.3	9.0
이라크	8.4	9.0	8.4	5.2	5.7	8.2	8.7
이란	-1.9	-1.3	1.1	-3.4	-2.8	-1.8	0.8

자료: IMF(2013), Regional Economic Outlook Update May 2013; Global Insight(2013), Country Intelligence Report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June 2013; EIU(2013), World Economy May 2013.

23) EIU(2013), Libya Country Report May 2013.
24) 장다연. *op cit.*
25) 이라크 중앙정부는 원유 생산 및 수출 등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통제하려고 하나 쿠르드 자치정부는 해당 지역 내의 원유 개발,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계약을 중앙정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체결하는 등 석유자원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려고 하여 양 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26) 특정물자는 △ 귀금속(precious metal) △ 흑연, 알루미늄, 철 등 원자재 혹은 반제품 금속(semi-finished metals), 석탄,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품목은 차후 미국정부가 결정하여 발표할 예정임.

라. 중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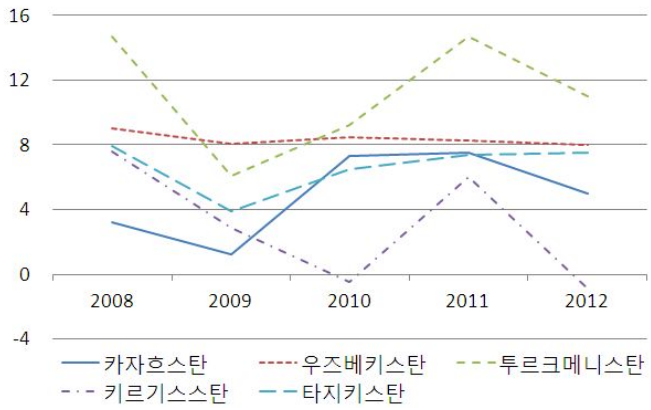
1) 주요국 경제 동향

■ 2012년 키르기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각국은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주요 수출품의 높은 수출가격 유지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성장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 키르기스스탄은 광산 관련 분쟁으로 최대 금광인 쿰토르 광산에서 금 생산량이 계획량의 45%로 감소하며 경제가 위축됨.[27]
- 카자흐스탄은 정부지출의 증가와 가계소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으로의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2.5%포인트 하락함.[28]
- 우즈베키스탄은 주요수출품(천연가스, 금, 구리, 면화 등)의 국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와 공공부문 임금인상에 힘입어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한 성장률을 기록함.
-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생산량 증대(전년대비 7.8% 증가)와 가스수출 증대(전년대비 18.8% 증가) 외에도 정부 주도의 투자증가에 힘입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전년보다는 낮아짐.[29]
- 타지키스탄은 해외이주노동자 송금 증가와 산업생산 증대, 농업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과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그림 53.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주: 전년대비, 실질 GDP 기준
자료: IMF(2013년 5월),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27) 쿰토르 광산은 생산이 감소한 2012년에도 키르기스스탄 GDP의 5.5%, 산업생산의 18.9%를 차지하였음. 쿰토르 광산은 금광 개발기업과 금광 지역주민 간의 분쟁으로 금 생산이 중단된 바 있으며 이 시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지대의 빙하 이동으로 광산이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생산중단이 장기화되었음.

28) EU의 대 카자흐스탄 수입증가율은 2011년 44.1%에서 2012년 6.5%(전년동기대비)로 크게 하락함. EU의 대카자흐스탄 수입액 중 80% 이상은 석유와 가스임.

29)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수출 증가세는 중국으로의 수출 증가가 크게 기여함. 2012년 대 중국 수출량은 전년대비 약 50% 증가하여 213억㎥를 기록함.

표 3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1/4분기
카자흐스탄	7.5	5.0	4.6
우즈베키스탄	8.3	8.0	7.5
투르크메니스탄	14.7	11.0	9.2
키르기스스탄	6.0	-0.9	7.6
타지키스탄	7.4	7.5	7.3

주: 전년대비, 실질.GDP 기준
자료: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May. 2013; 각국 통계청 및 각국 보도자료

■ 2013년 1/4분기,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은 예상보다 다소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

- 카자흐스탄은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농업생산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건설업의 부진으로 GDP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는 데 그침.
- 2012년에 유일하게 경제위축을 경험한 키르기스스탄은 올해 1/4분기 동안 금 생산이 빠른 회복세(전년동기대비 18.6% 증가)를 보였고 해외이주노동자 송금도 크게 증가(전년동기대비 7.1%)하며 경제성장세를 회복. 또한 남부지역 재건사업으로 인한 자본투자 증가의 영향도 받음.
- 우즈베키스탄은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에 힘입어 건설부문이 크게 성장(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하며 GDP 증가를 주도함.
  - ○ 건설부문 성장으로 인한 국내 수요 진작 및 민간소비 촉진과 공공임금 인상, 복지부문 지출 증가에 힘입어 7.5%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함.
- 타지키스탄은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에 그쳤으나 건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확대에 힘입어 7.3%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공공임금 인상과 주요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보고함.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수출국들은 재정지원과 국제기구의 차관을 통한 산업다변화와 수출산업 육성, 건설산업 확대와 공공임금 인상을 통한 국내경기 진작 등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 중

- 카자흐스탄은 비에너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다변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또한 녹색경제의 도입을 경제현대화의 한 수단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 중임.
  -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부펀드 등의 기금과 정부재원, 국제기구 차관, 외국인 투자유치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며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를 진행 중임.
  - ○ 또한 녹색경제 도입을 경제현대화의 한 수단으로 추진 중인데, 이는 국제기구의 차관 도입이 용이하고 녹색기술산업이 내수 진작을 위한 첨단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30]

○ 카자흐스탄은 2013년까지 WTO 가입을 완료할 예정이며 러시아가 주도하는 공동경제구역에도 참여 중으로 수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

– 우즈베키스탄은 국제기구로부터의 차관 및 원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산층 확대와 공공인프라 건설을 통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강화함.

○ 공공 인프라 투자확대와 공공임금 인상 등 재정지출의 증가와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통화확대가 지속되고 있으나 통화 확대정책 기조는 유지

○ 수입관세 인상과 신규 관세 도입으로 국산제품의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2년 현 대통령의 재선 이후, 경제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천연가스 생산 증대를 위한 투자 및 교역로 확보를 위해 역내 국가들과의 철도건설 협력도 추진 중임.

○ 면화가공 분야에 미화 10억 달러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 중인 투르크멘 정부는 최근 터키 업체와 2개의 면화 가공 공장 건설을 위한 협정에 서명

○ 2013년 7월부터 갈키니쉬 가스전[31]의 생산이 시작될 예정이며, 올해 카자흐스탄과의 철도 연결이 완료되었고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과의 철도 연결을 위한 협정에 서명함.

■ 키르기스스탄은 외국인투자 유치정책과 자원민족주의 정책이 충돌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은 국제기구의 금융지원 유지를 위해 거시경제 안정화정책을 운영 중

– 광산업 분야에 키르기스 정부는 입찰을 통해 주요 광산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나 이와는 반대로 해외 광산투자 기업에게 정부에 유리하도록 기존 계약의 변경을 강요하는 등, 자원민족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실행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

– 타지키스탄은 국제기구의 금융지원 조건인 균형재정 유지와 외채증가 억제를 위해 노력 중임.[32]

3) 2013년 경제전망

■ 2013년 하반기에 에너지 생산증대가 계획되어 있는 카자흐스탄을 제외하고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 국제 에너지 및 상품 가격의 약세로 상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카자흐스탄은 카샤간 유전의 석유 생산이 하반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석유 수출 확대로 경제성장률은 상반기에 비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 주도의 투자 확대도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임.

– 투르크메니스탄은 하반기에도 철도건설, 산업육성 등을 위한 정부 주도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가스 생산 설비도 추가되나 전반적인 가스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상반기보다는 낮은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임.

30) 카자흐스탄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에너지효율성 2020'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구체적 방안으로 에너지고효율 산업설비와 에너지 절약제품, 에너지 고효율 건축자재에 대한 내수 진작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31) 욜로탄, 오스만, 미나라, 야쉴라르 가스전을 통합 지칭함. 세계 2위 매장량을 지닌 투르크메니스탄 최대의 가스전임.

32) 2009년 4월, 타지키스탄은 IMF로부터 3개년에 걸쳐 PRGF(Poverty Reduction and Growth Facility)로 미화 1억 1,600만 달러를 제공받기로 하였음. 현재는 ECF(Extended Credit Facility)로 교체되어 총 미화 1억 6,400만 달러를 제공받기로 함. IMF의 특별차관 제공 조건은 균형재정 유지와 외채 증가 억제임.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 전망에 따라 국제상품가격(면화, 금 등)도 함께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하반기에는 경제성장세가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정부지출 증가와 외국자본 유입의 증가로 높은 인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음.

- 타지키스탄은 알루미늄과 면화의 생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국제상품가격 하락 전망으로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키르기스스탄은 금 생산 정상화, 정부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원민족주의 영향으로 인한 외국인투자 부진이 예견되고 주요 수출품인 금 가격의 하락이 전망되어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낮아질 것으로 보임.

표 33. 주요 기관별 2013년 중앙아시아의 경제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전망

		실질 GDP 증가율(%)	소비자물가 상승률(%)	경상수지 (GDP 대비 %)
카자흐스탄	IMF	5.5	7.2	4.0
	GI	5.1	6.5	4.2
	EIU	5.8	6.3	5.6
우즈베키스탄	IMF	7.0	10.9	3.5
	GI	7.3	11.3	4.4
	EIU	7.3	12.6	6.7
투르크메니스탄	IMF	7.7	5.6	2.5
	GI	8.0	5.8	2.5
	EIU	8.3	10.0	2.1
키르기스스탄	IMF	7.4	8.6	-7.6
	GI	7.1	8.0	-8.8
	EIU	4.5	6.5	-9.7
타지키스탄	IMF	7.0	7.7	-2.2
	GI	6.7	5.9	-5.2
	EIU	6.5	8.0	-3.9

자료: IMF(2013. 5), Regional Economic Outlook: Middle East and Central Asia; Global Insight(GI) 최근호; 최근 각국 EIU Country Report.

마. 아프리카

1) 주요국 경제 동향

■ 아프리카 역내 내수시장의 호조세와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로 성장세 지속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는 민간 소비의 증가, 인프라·건설 부문 투자 확대, 비교적 안정적인 국제 1차 산품 가격 등에 의해 견조한 성장을 시현 중임.

○ 역내 중산층의 구매력이 강화됨에 따라 민간 소비가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역내 내수시장이 확대됨.

○ 도시화의 가속화와 동아프리카 지역의 자원개발 붐으로 인해 인프라 및 건설 수요가 증대하였으며, 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건설사업의 고수익성을 겨냥한 외국인 투자자본의 유입이 증가일로에 있음.

– 원유수출국은 국제유가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6% 후반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득국의 성장세 둔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프리카 원유수출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에는 충분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 중소득국군의 성장 둔화세는 남아공 경제의 저성장세에 기인한 것으로, 노사관계 악화 및 고실업의 지속, 란드화 급락, 주요 교역 대상지역인 중국의 경기 둔화세와 유럽 긴축재정의 영향 등으로 2013년 1/4분기 성장률이 0.9%에 그침.[33]

표 34.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단위: %)

구분	2011	2012	2013	2014
SSA 전체	5.3	5.1	5.4	5.7
원유수출국[34]	6.1	6.4	6.6	6.8
– 앙골라	3.9	8.4	6.2	7.3
– 나이지리아	7.4	6.3	7.2	7.0
원유수입국	5.9	5.8	6.2	6.3
중소득국[35]	4.7	3.3	3.6	4.0
– 남아공	3.5	2.5	2.8	3.3
– 가나	14.4	7.0	6.9	6.8
– 잠비아	6.8	7.3	7.8	8.0
저소득국·취약국	5.0	6.0	6.4	6.6
– 모잠비크	7.3	7.5	8.4	8.0

주: 1) 원유수입국 통계는 남아공을 제외한 수치.
2) 2013년과 2014년은 전망치.
자료: IMF(2013년 5월).

표 35. 주요 경제지표

(단위: %, 개월)

구분	2011	2012	2013	2014
소비자물가상승률	9.3	9.1	7.2	6.3
– 원유수출국	9.6	10.3	9.0	7.3
– 원유수입국	9.1	8.4	6.3	5.8
재정수지(GDP 대비)	−1.3	−1.7	−2.7	−2.8
– 원유수출국	3.5	2.7	−0.1	−1.1
(나이지리아 제외)	7.1	5.0	−0.9	−1.7
– 원유수입국	−3.7	−4.5	−4.1	−3.2
경상수지(GDP 대비)	−1.4	−2.8	−3.5	−3.9
– 원유수출국	5.1	5.9	3.8	2.7
– 원유수입국	−5.0	−7.9	−7.8	−7.9
외환보유고(수입결제 기준)	4.5	4.7	4.9	5.1

주: 2013년과 2014년은 전망치.
자료: IMF(2013년 5월).

33) 남아공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GDP의 30.5%, 아프리카 중소득국 GDP의 76.5%를 차지하는 역내 경제대국임(2007~11년 5년간 GDP 합계 기준,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34) 아프리카 원유수출국 통계에는 앙골라,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나이지리아, 남수단이 포함됨.
35) 보츠와나, 카보베르데, 가나, 레소토, 모리셔스, 나미비아, 세네갈, 세이셸, 남아공, 스와질란드, 잠비아 11개국이 아프리카 중소득국에 속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하락세 지속

- 세계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가 추진한 팽창 통화정책이 아프리카 국가의 물가상승 압박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에 도입된 긴축 통화정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최근 들어 국제 식품 및 연료 가격이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은 2011년 가뭄에 따른 곡물수급 불균형 심화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1.3%에 달하였으나 2013년에는 48.8% 하락한 10.9%를 기록할 전망
  - ○ 지역별로는 유로화에 연동된 CFA 프랑화를 사용하는 중부아프리카(3.5%, 2013년 전망치)와 프랑스어권 서부아프리카 국가가 가장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아프리카개발은행, 2013년 5월).

2) 정책 현안 및 방향

■ 소비자물가 상승압력을 통제하기 위한 긴축 통화정책의 도입 · 확대

- 2011년 국제 유가 및 곡물가격이 재상승하고 동아프리카 지역 가뭄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급증하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대대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긴축 통화정책을 도입
  - ○ 특히 물가상승률이 20%에 육박한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의 동아프리카 국가는 물가억제를 위해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함.
  - ○ 기후여건 개선에 따른 농업생산성 향상과 국제유가 하락세 등과 맞물려 이와 같은 긴축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 완화에 크게 기여함.
- 한편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목표범위에 있는 남아공은 경기위축을 우려하여 정책금리를 5%로 동결함.
  - ○ 안정적인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 중인 서부아프리카경제통화동맹(WAEMU, West Afric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회원국[36]은 금리인하를 통한 유동성 확대정책을 실시 중임.

■ 재정건전화를 위한 긴축 재정정책 기조 유지

- 세계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가 확장 재정정책을 견지, 재정수지가 악화됨에 따라 정책적 대응여력(fiscal space)과 부채상환능력(debt sustainability)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 이후 긴축적 재정운용 기조로 선회
  - ○ 긴축 재정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로는 가나, 에티오피아, 보츠와나, 르완다, 말라위,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이 있음.
- 일부 원유 및 자원수출국 및 저성장국이 경기부양을 위해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는 남아공,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카메룬, 나미비아, 잠비아 등임.
  - ○ 고용유발효과가 낮은 석유산업에 의존적인 원유수출국은 공통적으로 고실업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를 해

36) 베냉,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기니비사우, 말리, 니제르, 세네갈, 토고 등의 프랑스 피지배국가의 화폐공동체로 상용화폐인 역내 통용화폐인 CFA 프랑화는 유로화에 연동되어 있음.

결하기 위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정부주도형 대형 인프라 ·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한편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세로 인해 재정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원수출국의 재정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고 있으며, 남아공의 경우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8%에 달함.

○ 이에 따라 나이지리아(긴축 재정정책 시행 중)를 제외한 원유수입국은 2012년 GDP 대비 5.0% 재정흑자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0.9%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3) 2013년 경제전망

■ 인프라 · 건설에 대한 투자 확대와 역내 소비 증가로 2013년 아프리카는 5% 내외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권역별로는 서부아프리카와 중부아프리카가 각각 6.7%, 5.7%로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로는 내전 종전(2011년) 이후 정치적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코트디부아르(8.9%)와 신생 자원부국이자 정치여건이 안정적인 모잠비크(8.5%)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전망

○ 동아프리카 연안의 천연가스 개발사업과 모잠비크 · 가나 · 기니 · 라이베리아 · 나이지리아 · 시에라리온 등의 국가에 대한 광업부문 투자 확대가 고성장 추세를 견인

- 아프리카개발은행은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2012년 497억 달러에서 13.9% 상승한 56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37)]

- 다만 아프리카 최대 경제대국인 남아공의 경기부진 장기화와 말리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토고 등의 정치적 불안정, 외부 환경변화에 취약한 1차 산품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고용 없는 성장과 고실업, 소득불평등의 심화 등은 아프리카 경제발전의 장애 · 정체 요인으로 작용

표 36. 주요 기관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

	IMF(5월)	AfDB(5월)	UN(1월)	Global Insight(6월)
2012년	5.1	6.6	5.1	4.9
2013년	5.4	4.8	4.6	5.1
2014년	5.7	5.3	5.1	5.3

주: AfDB(2013. 5)와 UN(2013. 1)의 통계치는 북아프리카지역을 포함.
자료: IMF(2013. 5); AfDB(2013. 5); UN(2013. 1); Global Insight(2013. 6).

■ 소비자물가상승률 대폭 하락 전망

- 아프리카 국가들의 동시적인 긴축 통화정책 및 재정건전화 계획과 국제 식품 및 연료 가격의 안정세로 인해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012년 9.1% → 2013년 전망치 7.2% → 2014년 전망치 6.3%(IMF, 2013년 5월) KIEP

37) 북아프리카 지역이 포함된 수치임(AfDB, 2013. 5).

연구진

총괄	정성춘	국제경제실장 (jung@kiep.go.kr, Tel: 3460-1202)
개관	이동은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장 (derhee@kiep.go.kr, Tel: 3460-1151)
성장률 전망	이동은	국제경제실 국제거시팀장 (derhee@kiep.go.kr, Tel: 3460-1151)
	강은정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ejkang@kiep.go.kr, Tel: 3460-1187)
국제금융시장	양다영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dyyang@kiep.go.kr, Tel: 3460-1223)
국제상품시장	강은정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ejkang@kiep.go.kr, Tel: 3460-1187)
국제통상환경	정 철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연구위원 (cchung@kiep.go.kr, Tel: 3460-1184)
	이준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연구원 (jwlee2@kiep.go.kr, Tel: 3460-1088)
미국경제	고희채	국제경제실 북미 · 대양주팀 전문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유럽경제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장 (ydkang@kiep.go.kr, Tel: 3460-1123)
	김준엽	국제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junyupkim@kiep.go.kr, Tel: 3460-1064)
	오태현	국제경제실 유럽팀 전문연구원 (asroc101@kiep.go.kr, Tel: 3460-1159)
일본경제	김규판	국제경제실 일본팀장 (keiokim@kiep.go.kr, Tel: 3460-1017)
	서영경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원 (yksuh@kiep.go.kr, Tel: 3460-1236)
중국경제	문익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ijmoon@kiep.go.kr, Tel: 3460-1024)
인도경제	김미수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 · 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misukim@kiep.go.kr, Tel: 3460-1152)
	송영철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 · 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Tel: 3460-1067)
러시아경제	민지영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 · CIS팀 연구원 (jymin@kiep.go.kr, Tel: 3460-1095)
브라질경제	권기수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장 (kskwon@kiep.go.kr, Tel: 3460-1081)
동남아시아경제	박나리	신흥지역연구센터 동남아팀 연구원 (nrpark@kiep.go.kr, Tel: 3460-1096)
중남미경제	김진오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남미팀 전문연구원 (jokim@kiep.go.kr, Tel: 3460-1085)
중동경제	박재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jepark@kiep.go.kr, Tel: 3460-1165)
	손성현	신흥지역연구센터 중동팀 연구원 (shson@kiep.go.kr, Tel: 3460-1266)
중앙아시아경제	주진홍	신흥지역연구센터 러시아 · CIS팀 전문연구원 (joojh@kiep.go.kr, Tel: 3460-1053)
아프리카경제	전혜린	신흥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팀 전문연구원 (hljeon@kiep.go.kr, Tel: 3460-1116)